

기획연구 2007-10

충남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연구

김봉한 · 김흥기 · 신동호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의 검토	3
제2장 외국인 투자의 이론적 논의	5
1. 개념과 유형	5
2. 동기 및 결정요인	7
3. 경제적 파급효과	9
제3장 외국인 투자의 현황	12
1. 세계의 FDI 동향	12
2. 국내의 FDI 동향	13
3. 충남의 FDI 동향	24
제4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31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31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3
3.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46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과 만족도 분석	54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특성	54
2.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특성	59
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전국	72
4.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지역별	76
 제6장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의 정책과제	85
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85
2. 충남의 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103
3. 지역경제와 연계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방안	108
4.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116
 제7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0

표 목 차

<표 2-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FDI의 정의	6
<표 3-1>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14
<표 3-2>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17
<표 3-3>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18
<표 3-4> 우리나라의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추이	20
<표 3-5> 우리나라의 유형별·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0
<표 3-6> Greenfield형 투자와 M&A형 투자의 효과 비교	21
<표 3-7>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추이	21
<표 3-8> 업종별·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추이	22
<표 3-9> 외국인직접투자 도착 대비 회수 비중	23
<표 3-10> 시도별 외국인투자 건수의 추이	24
<표 3-11> 시도별 외국인투자 금액의 추이	25
<표 3-12> 충남의 연도별 투자현황	26
<표 3-13>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 2006년말 기준	28
<표 3-14> 2006년 충남의 유형별 투자현황	28
<표 3-15> 충남의 국가별 투자현황	29
<표 3-16> 2006년 충남의 업종별 투자실적	29
<표 3-17> 충남의 규모별 투자실적	29
<표 3-18> 충남의 민선4기 FDI 주요 실적	30
<표 4-1>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과 대 명목GDP 비율 추이	32
<표 4-2>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제조업의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33
<표 4-3>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추이	33
<표 4-4> 소재부품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투자비중 추이	34

<표 4-5> 1사당 평균 고용인원 변동 추이	35
<표 4-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 증가 추이	36
<표 4-7>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 추이	36
<표 4-8>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액	37
<표 4-9> 28개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액	38
<표 4-10>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39
<표 4-11> 28개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41
<표 4-12> 패널모형의 추정결과	43
<표 4-13> 외국인투자의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경기도	44
<표 4-14> 경기도 외국인설비투자에 의한 지역별 유발 효과	45
<표 4-15> 외국인 직접투자 10% 증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효과	46
<표 4-16> 2006년 충남 업종별 투자실적	46
<표 4-17> 2006년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48
<표 4-18> 충남 외투기업의 특성	49
<표 4-19>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50
<표 4-20>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수익성	51
<표 4-21>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안정성	51
<표 4-22>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성장성	52
<표 4-23>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과 투자효율	52
<표 4-24> 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52
<표 4-25> 충남 내국기업과 외투기업의 차이성 검정결과: t -검정	53
<표 5-1> 외투업체 입지분석특성의 정책적 시사점	58
<표 5-2>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등록 연도 추이: 시군별	59
<표 5-3>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	60
<표 5-4>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I	61
<표 5-5>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63
<표 5-6> 서울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64
<표 5-7> 경기도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65

<표 5-8> 수도권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66
<표 5-9>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69
<표 5-10>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70
<표 5-11> 응답자 특성	72
<표 5-12> 분야별 개선 요구 사항	76
<표 5-13> 인력채용 만족도 조사결과	77
<표 5-14> 인력채용 만족도 조사결과	77
<표 5-15> 공장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만족도 조사결과	78
<표 5-16> 공장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관련 개선 사항	79
<표 5-17>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시 중요 고려사항	80
<표 5-18> 공장 입주 방식	81
<표 5-19> 물류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82
<표 5-20> 물류관련 개선요구 사항	83
<표 5-21> R&D 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84
<표 5-22> R&D 환경 개선요구 사항	84
<표 6-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86
<표 6-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86
<표 6-3>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87
<표 6-4> 조세감면대상기업	89
<표 6-5> 조세감면 내용	90
<표 6-6>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현황	91
<표 6-7> 현금지원 내역	93
<표 6-8> 입지지원 내용	95
<표 6-9>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주요 산업입지제도	97
<표 6-10> 재정지원 내용	98
<표 6-11> 지방세 감면	103
<표 6-12> 입지지원(전용임대단지 임대료감면, 공유재산 임대)	105
<표 6-13> 입지보조금(분양가보조금, 용지매입비)	105
<표 6-14>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105

<표 6-15> 현금지원	106
<표 6-16> 시설보조금	106
<표 6-17> 생활환경개선지원	106
<표 6-18> 유공자 포상제도	107
<표 6-19> 한국의 기업 환경 조사	108
<표 6-20>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109
<표 6-21> 산업별 유치 전략	116
<표 6-2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별 · 단계별 개발계획	119
<표 6-23> 경제자유구역 지원제도	120
<표 6-24> 충남의 외국인 투자지역	121
<표 6-25> 투자유치 유형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	122

그림목차

<그림 2-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11
<그림 3-1> 전세계 FDI 유입추이	12
<그림 3-2> 외국인 투자유입액 추이	14
<그림 3-3> 국별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00-2004년중)	15
<그림 3-4> 지역별 ·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액	19
<그림 3-5> 외국인투자기업 시도별 현황	27
<그림 5-1> 제조업 FDI기업의 지역집적 및 상위집적지역(공장수 기준)	55
<그림 5-2> 충남,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등록 추이	68
<그림 5-3> 충남의 주요 외투기업의 위치	71
<그림 5-4>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	73
<그림 5-5> 경영환경 만족도 평가	74
<그림 5-6> 분야별 중요도 평가	74
<그림 5-7> 향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75
<그림 6-1> 외국인 투자 유치체계	100
<그림 6-2>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	101
<그림 6-3> 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한 외자유치 방향	117
<그림 6-4> 황해경제자유구역	118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간 경제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90년대부터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0-80년대에는 종속이론 등의 영향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구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자, 그 동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던 해외 직접 투자가 개발도상국에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9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 직접 투자는 주로 선진국간에 이루어졌으며 90년대에는 세계 총 투자액의 79%에 달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직접 투자 총액 중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출촉진 및 수입 대체를 통하여 경상수지의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대외통상 마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를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1998년 9월 17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절차 개선과 투자인센티브 확대 및 수요자 중심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Invest KOREA로 확대 재편('03.12.5)하고,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지역산업발전과 연계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FDI의 역작용을 지적하는 동시에 외자 유치와 외자기업의 효율성 극

대화를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관련업계의 체계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외자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희(2004)는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해 세부실행전략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외환위기 해소 및 구조조정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외자유치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즉, 자본·인력 및 기술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하거나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철수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우려마저 낳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충남지역 또한 장기적으로는 무원칙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신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장점인 대규모 기업의 존재 등을 적극 활용되도록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을 개괄하고,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모형으로 분석하고 기존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는 충남의 외국인 투자현황을 기술적인 통계분석으로 파악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한다. 셋째,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애로사항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연구이다.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여타 시도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의 해외자본 유치에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은 없지만 향후 충남의 해외자본유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계량경제분석으로는 2개의 모형이 사용되었다. 먼저 충청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외자도입이 지역소득, 고용량 및 부가가치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충남의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데이터를 사용해서 외자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panel 회귀식을 추정하여 외자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살펴보겠다. 셋째, 설문조사의 활용이다. KORTA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중에서 충남외자기업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외자 기업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살펴 보겠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최근 연구는 최근에는 거의 없고, 김억현(1999)이 본 연구자가 찾은 유일한 선행연구이다. 김억현(1999)은 분석기간이 1990년대 후반으로 최근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시사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억현(1999)의 경우는 계량분석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1990년대 후반에 충남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충남이 아닌 전국이나 여타 시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남광희·윤성훈(2006), 김군수(2006), 울산발전연구원(2001), 경남발전연구원(2000), 및 이석희(2004) 등이 있다. 김군수(2006)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해서 해외첨단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효과분석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파급효과분석을 기초로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울산발전연구원(2001)은 울산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모형으로 추정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분석한 후 울산의 공업입지적 특성과 투자 유치 환경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외국투자유치 방안을 도출하였다. 경남발전연구원(2000)은 외국의 기계부품소재 기업의 경남유치 방안을 연구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북잉글랜드 지방의 사례를 연구하여 경남에 외국의 기계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석희(2004)도 경제효과분석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영국,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대분의 여타 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경제효과분석을 주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 이후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대한 방안의 도출시 엄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충남의 산업과 유사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장 외국인 투자의 이론적 논의

1. 개념과 유형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기업, 개인 또는 정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 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해외 현지에 이전하여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투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국제사업방식을 의미한다(강태구, 2003).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주식매매 등과 같은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는 간접투자(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와 구분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 행위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IMF(1977)는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로서, 경영에 있어서 유효한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1961)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현지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투자로서, 특히 해당 기업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 임원 파견 계약의 체결, ②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포괄한다(산자부, 2002)¹⁾.

1) 1976년 국제투자조조사법(International Investment Survey Act of 1976)에 따르면, 직접투자는 법인을 포함하여 1인이 외국법인기업의 10% 또는 그 이상의 의결권부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그와 동등한 권익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국도 외국인직접투자를 10%의 최저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단독투자는 기업신설형(greenfield) 투자, 인수합병(M&A), 민영화 참여와 BOT 사업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합작투자에는 투자 혹은 출자를 통한 합작기업 설립과 전략적 제휴가 있다. 기업신설 방식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투자 유치국에 투자를 통해 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수합병 방식의 투자는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의 총체적 인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현지국 공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경우를 민영화라고 하며, BOT 사업 투자는 투자 유치국 내에 투자 시설을 설치하고(Build), 일정기간 운영하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한 다음(Operate),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투자 허가상의 절차에 따라 투자국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하는(Transfer) 방식이다.

〈표 2-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FDI의 정의

구 분	내 용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원의 파견 계약을 체결 ②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 -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여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말함.
투자형태	신주취득, 기존주식취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장기차관

BOT에는 변형된 형태인 BLT(Build, Lease, Transfer), BTL(Build, Transfer, Lease), BT(Build, Transfer) 등이 있다. 그리고 합작기업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형태이다. 경영권 참여를 위한 공격적인 합작기업을 투자기업이라고 하며, 경영권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수동적인 합작기업을 출자기업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전략적 제휴가 있는데, 광의로는 합작투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용록, 20001).²⁾

2. 동기 및 결정요인

외국인직접투자 동기 및 결정요인은 크게 시장 확보(market oriented), 자원 확보(resource oriented), 효율성 확보(efficiency oriented), 기술 및 자산 확보(technology and asset oriented), 네트워크 추구(network oriented), 무역장벽 회피(trade oriented)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양수, 2003; 강태구, 2003)³⁾.

먼저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이 자사가 독점적, 배타적 기술이나 브랜드, 또는 마케팅기법 등과 같은 경쟁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외에 생산시설 등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이 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원료, 기술, 노동력, 자본 등 주요 생산요소들을 외국에서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효율성을 추구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가장 최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기술 및 자산 확보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이 고도의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 자산 등 핵심 역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해외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이

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강태구, p109-111). 첫째,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기업이 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수직적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이 최종재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진출하거나(후방통합: backward vertical foreign investment)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전방통합: forward vertical foreign investment)를 의미한다. 셋째, 다각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제품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각기업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3) 다국적기업 등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추진하는 동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Berhman(1972), Dunning(1980), OECD(1983), Bachtler(1998), UNCTAD(1998)을 참고할 수 있다.

해외계열사 및 현지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투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Dunning(1980)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진출 동기에 따라 시장 접근형과 생산 거점형으로 구분하였다. 시장 접근형은 기업이 보유한 독점적 우위를 이용하여 투자 유치국 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모색하는 경우이다. 생산 거점형은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투자 유치국의 입지 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OECD(1983)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을 마케팅 요인, 무역장벽 요인, 비용요인, 투자여건 및 기타 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케팅 요인에는 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 시장 점유율 유지, 본사의 수출촉진전략, 고객과의 긴밀성, 기존 시장에 대한 불만 및 수출기지 활용 등이 포함되며, 무역장벽 요인에는 무역장벽과 현지 시장의 제품 선호도가 고려된다. 비용요인에는 공급처 인접성, 노동력 및 원재료의 이용, 자본/기술의 이용, 인건비, 운송비 등 저렴한 생산비, 현지정부의 금융 지원정책, 유리한 비용 수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투자여건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국의 태도, 정치적 안정성, 소유권 문제, 외환 규제, 환율의 안정성, 조세정책, 현지국과의 친숙성 등이 있으며, 높은 예상 수익률 등도 포함된다.

UNCTAD(1998)는 다국적기업 등이 투자지역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기초, 경제적 유인, 사업수행 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유인 이외의 투자 유치국의 정책요인과 사업수행환경을 강조한다. 특히 투자 유치국의 정책 요인에는 경제, 정치, 사회적 안정성,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형평성, 민영화정책,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환경으로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 존재 여부, 부패 등 경제의 투명성 정도,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투자실행 관련 지원정책 등이 있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투자 유치국의 시장 구매력, 저임금 숙련 노동자 등의 생산요소 비용, 교통 및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비 여부 등이 투자 결정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⁴⁾.

4)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은 투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을 다수 구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Michel, 1998; 한국은행 제주지점, 2001에서 재인용). 중국이 보유한 경제적 유인은 ①12억 인구의 소비 잠재력, ②빠른 성장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 ③높은 교육 수준과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④조세감면 등 우호적인 경제정책, ⑤사회간접자본의 빠른 확충 등이라고 지적하였다.

3. 경제적 파급효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Caves(1982), WTO의 무역과 투자 작업반, Moosa(2002), 산업연구원(2001), 이병기(2002) 및 남광희·윤성훈(2006) 등의 연구가 있다. UNCTAD는 1992년 '다국적기업과 경제발전'을 발표한 이후 고용, 경쟁력, 산업조직, 기술혁신 등에 대한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으며, OECD와 World Bank도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Caves(1982)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원이전효과(resource transfer effects)로 외국기업들은 자본, 기술, 경영 등에 있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들을 투자유치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역 및 국제수지 효과(trade & balance-of-payment effects)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성향과 결과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에 미치는 효과 등이다. 셋째,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s)이다. 시장집중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초기에는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하나 후기에는 경쟁 촉진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다르다는 주장이 있고 최근 시장 경쟁성 개념이 도입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WTO의 무역과 투자 작업반은 자본형성 효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 효과, 수출시장 접근 효과, 기업가 양성 및 전후방 연계 효과, 경쟁 효과, 고용 효과, 국제수지 및 거시경제 안정 효과 등을 지적하였다.

Moosa(2002)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현지국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본 확충 효과, 생산과 성장 효과, 고용과 임금 효과, 국제수지 효과, 무역 효과, 생산성 효과, 기술 효과, 훈련 효과, 산업간 연계 효과, 시장구조 효과, 환경 효과 등으로 구분하였다. Krugman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을 거시 경제적 효과, 미시 경제적 효과 및 전략적 효과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거시 경제적 효과는 투자, 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극히 미미하나, 환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시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 유발 가능성과 수입성향의 상대적 상승에 대해 우려하였다⁵⁾.

5) 국내외적으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할값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론과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지배론이 등장하였다. '98-'99년간에 제벌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계열사

국내에서는 산업연구원(2001)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는 투자유치국의 경제 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잠재 효과의 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유치국의 4대 요소는 ① 거시경제여건, ② 산업구조, ③ 기술·인적 학습역량, ④ 경제제도 및 산업정책 등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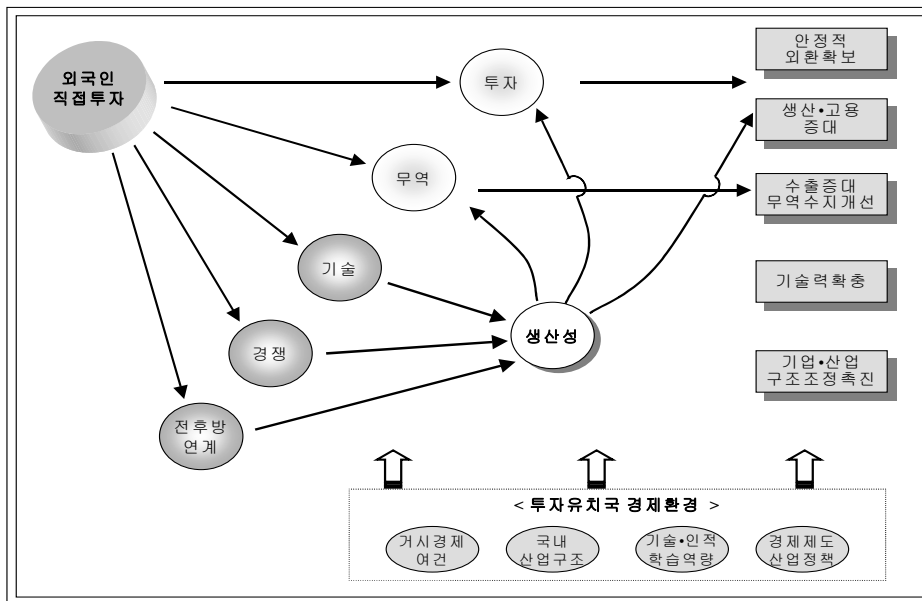
이병기(2002)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 내 생산성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이다. 산업내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많은 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내 생산성 파급효과를 나타내는데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생산성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지분이 클수록 생산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국국적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매우 유의한 통계값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통계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광희·윤성훈(2006)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승수효과를 통해 투자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축적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여 과거처럼 자본형성의 경제성장 기여

및 사업부문 매각에 대해 외국기업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국부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야당과 사회일각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및 한전, 한통 등의 지분 혹은 경영권의 해외매각 및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등에 대해 국부유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인투자의 급증과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철폐에 따라 외국기업의 빠른 국내시장 잠식과 국내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업종(종묘, 종이생리대, 신문용지, 일차전지, 맥주 등)에서 외국기업들이 M&A를 통하여 국내시장을 지배하게 되자 국내 산업이 외국기업의 지배 하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었다. 국제적으로 제기되었던 비판적 견해도 있는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려는 단기간 내에 외국인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나라들에서 예외 없이 표출되었다. 70년대 멕시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반대하는 종속이론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하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80년대 말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대거 진출해오자 헐값 매각론(fire sale)과 미국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산업연구원, 2001, p14-16)

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본심화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에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여한다면 경제성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한 기술 체화가 자본 심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 2-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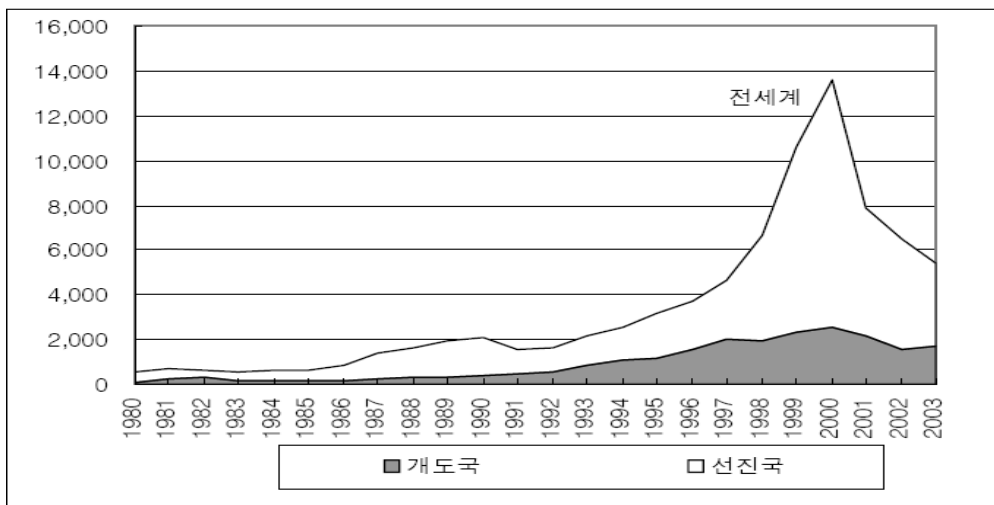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2001)

제3장 외국인 투자의 현황

1. 세계의 FDI 동향

198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1980년도에 FDI의 유입액이 55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086억달러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5,596억 달러로 23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전세계 GDP가 약 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FDI가 급속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전세계 FDI 유입추이



주: 개도국의 유입액이 아래 영역에, 선진국의 유입액은 그 위 영역에 표시되어 있음. 따라서 두 영역을 합친 누적 영역이 전세계 유입액을 나타냄.

자료: 남광희·윤성훈(2006)

지역별로 보면 FDI 유입의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집중되었는데, 1980년도에는 전세계 FDI 의 84.6%가 선진국에 유입되었다. 한편 1990년도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 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도에는 30.7%가 이들 국가로 유입되었다. 2003년도에는 전 세계적 FDI 가 감소하였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입으로 전년 대비 9.1%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액의 약 30%,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의 약 50%를 차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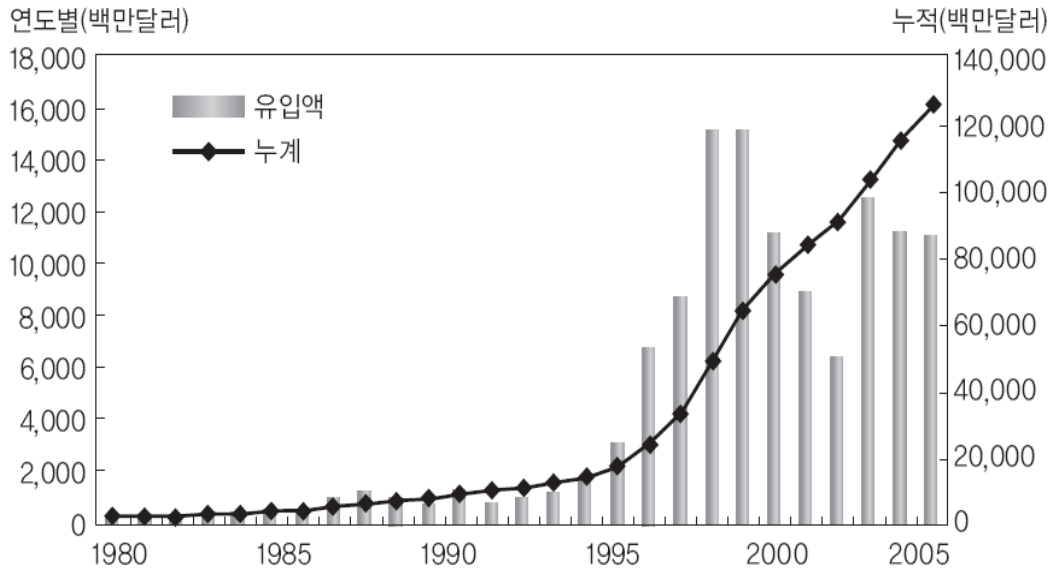
FDI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여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 FDI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1991년 중의 54%에서 2001-2002년 중 67%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중 제조업의 비중은 39%에서 24%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비교역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저장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직접 생산되고 공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형태로는 M&A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36.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82.4%로 급증하였다. 이후 M&A의 비중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53.1%를 기록하였다.

2. 국내의 FDI 동향

FDI 유입액(산업자원부 신고액 기준)은 1980년대에 연평균 5.5억 달러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 89억 달러, 1999년에는 15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1-2002년 중에는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다가 2003년도에는 65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04년 중에는 조세감면 축소 계획 등의 영향으로 128억 달러 크게 증가한후 2006년에는 11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FDI 유입이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외개방적인 국내투자환경의 개선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외국인 투자유입액 추이



주: 신고액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표 3-1〉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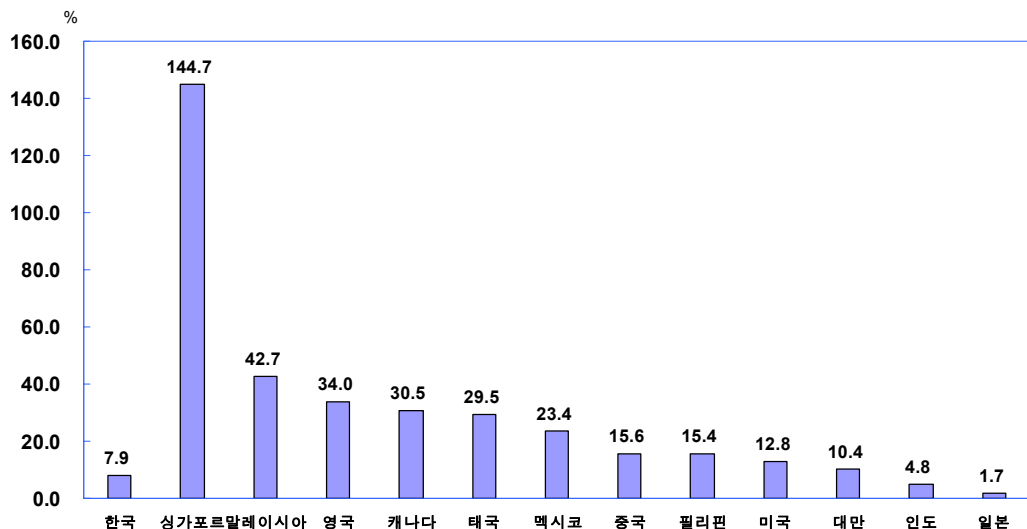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고액 (증감율)	8,853 (27)	15,531 (75.4)	15,212 (-2.1)	11,286 (-25.8)	9,093 (-19.4)	6,469 (-28.9)	12,786 (97.7)	11,563 (-9.6)	11,236 (-2.8)
신고건수	1,401	2,103	4,142	3,344	2,409	2,564	3,073	3,667	3,111
도착액	5,323	11,015	10,267	5,076	3,808	5,115	9,262	9,601	9,055
도착율	60	71	67	45	42	79	72	83	81

자료: 산업자원부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절대적으로 열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율(2000-2004년중, 7.9%)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2%대에서 2005년 8.0%로 높아졌으나 노사관계 불안,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세제관련 인센티브 부족, 및 외국인투자자 주거환경 열위 등으로 인해 전세계, 개도국 및 동남아 등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3〉 국별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00-2004년중)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FDI inward stock/GDP)

2006년 누계기준으로 전체 FDI 유입액이 1,267억 달러인데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538억 달러로서 42.5%를 차지하였고, 서비스업은 666억 달러로 52.6%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왔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8%, 2004년 48.6%, 2006년 37.8%를 차지하였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1년 64.1%, 2004년 48.0%, 2006년 58.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집중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2001-2006년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 12.0%, 화공 6.0%, 운송용 기계 4.8%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제조업종내에서 과거와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유입실적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동기간중 서비스업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금융·보험(23.4%)이다. 2004년까지 누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도·소매업종은 동기간중 8.7% 차지하는데 그쳐 비중이 두 번째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심의 EU에서 주로 유입되었다. 2006년 누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366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전체 유입액의 28.9%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각각 전체 유입액의 15.4%인 195억 달러와 10.9%인 13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미국은 주로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및 문화·오락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 투자한 반면 네덜란드는 식품, 의약, 전기·전자 등 제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도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유입 순위는 과거 누계 기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일본과 조세회피지역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투자가 감소된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증대되고 있다.

〈표 3-2〉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1962~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9	7	7	16	18	6	6	1	10	3	10	2	236	422
제조업	681	2,911	582	2,337	588	1,699	693	6,217	745	3,076	713	4,246	12,727	53,779
식품	37	624	32	48	31	42	31	118	31	325	18	60	680	4,169
섬유직물의류	38	200	32	56	25	15	19	7	20	29	24	223	669	1,126
제지목재	7	68	15	52	9	36	7	20	15	85	9	10	247	2,660
화학	81	515	72	141	77	690	67	1,377	86	278	83	764	1,911	9,851
의약	13	19	9	45	6	16	19	167	13	8	13	56	178	1,029
비금속광물	20	241	16	65	22	41	15	116	29	376	24	159	477	2,566
금속	35	57	26	507	32	150	41	105	37	29	44	247	782	2,579
기계장비	75	85	73	220	87	241	102	358	118	128	109	361	1,851	4,859
전기전자	241	896	188	517	194	299	274	2,949	252	1,041	241	1,803	3,636	17,864
운송용기계	66	145	71	588	62	121	77	907	112	706	114	499	1,127	6,140
기타제조	68	69	48	96	43	47	41	93	32	72	34	64	1,096	936
서비스업	2,600	7,230	1,778	5,122	1,920	4,132	2,329	6,141	2,858	8,301	2,343	6,622	22,579	66,644
도소매(유통)	1,658	1,490	1,109	587	1,224	945	1,548	1,129	1,936	807	1,437	495	14,463	16,524
음식숙박	103	437	90	815	91	211	99	53	108	307	89	1,114	1,014	6,796
운수창고(물류)	61	22	54	417	64	116	72	372	75	364	114	568	786	2,688
통신	30	156	16	68	16	505	15	44	18	638	8	50	229	2,077
금융보험	198	1,769	166	1,023	157	1,650	134	3,221	151	3,920	148	3,021	1,538	21,505
부동산임대	50	555	41	566	70	338	85	264	90	959	90	325	557	4,443
비즈니스서비스업	386	292	207	273	223	279	290	478	355	964	341	717	3,113	4,978
문화오락	58	2,496	40	1,352	25	24	38	470	65	309	60	308	397	6,864
공공기타서비스	56	14	55	21	50	64	48	110	60	34	56	24	482	770
전기가스수도건설	51	1,139	42	1,618	42	633	49	433	54	184	45	366	577	5,903
전기가스	13	444	5	1,099	3	91	21	405	8	91	9	22	85	3,049
수도	4	66	1	0	0	0	0	0	0	0	1	0	6	66
종합건설	22	627	29	517	33	542	20	28	30	89	25	295	317	2,565
전문직별건설	12	1	7	2	6	1	8	1	16	4	10	49	169	223
합 계	3,341	11,286	2,409	9,093	2,568	6,471	3,077	12,792	3,667	11,563	3,111	11,236	36,119	126,748

자료: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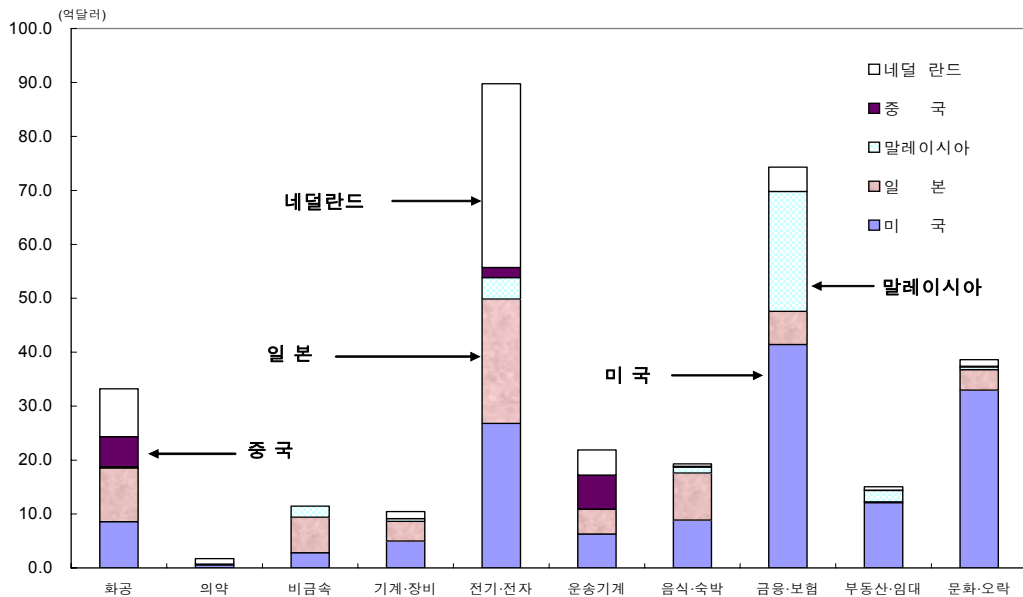
〈표 3-3〉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단위 : 건, 백만달러)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6	비 중	1962~ 2006	비 중
국제협력기구	16	0	0	0	0	0	16	(0.0)	272	(0.2)
미주지역	5,581	4,480	1,842	5,199	3,107	1,938	22,517	(36.1)	45,366	(35.8)
미국	3,882	4,491	1,242	4,718	2,690	1,701	18,723	(30.0)	36,632	(28.9)
캐나다	1,506	261	71	224	193	83	2,339	(3.7)	3,491	(2.8)
버뮤다	57	6	6	35	40	8	153	(0.2)	1,673	(1.3)
케이만군도	20	43	301	189	144	95	792	(1.3)	2,401	(1.9)
버진아일랜드	81	31	166	26	23	41	367	(0.6)	782	(0.6)
기타	36	18	55	7	17	10	144	(0.2)	358	(0.3)
아주지역	2,346	2,270	1,488	4,301	3,512	4,007	17,922	(28.7)	38,079	(30.0)
일본	776	1,404	542	2,262	1,879	2,108	8,971	(14.4)	19,534	(15.4)
싱가포르	188	146	236	376	389	557	1,892	(3.0)	4,043	(3.2)
홍콩	167	234	55	89	820	165	1,531	(2.5)	2,887	(2.3)
말레이시아	785	210	417	167	211	66	1,856	(3.0)	6,939	(5.5)
중국	70	249	50	1,165	68	40	1,643	(2.6)	1,795	(1.4)
대만	314	9	15	17	13	18	386	(0.6)	766	(0.6)
기타	45	18	172	224	132	1,054	1,644	(2.6)	2,115	(1.7)
구주지역	3,108	1,870	3,092	3,213	4,874	5,232	21,390	(34.3)	42,233	(33.3)
독일	459	284	370	487	705	484	2,789	(4.5)	7,279	(5.7)
영국	433	115	871	642	2,308	705	5,074	(8.1)	6,490	(5.1)
프랑스	426	111	150	180	85	1,174	2,126	(3.4)	4,712	(3.7)
벨기에	201	73	1,347	179	54	567	2,420	(3.9)	3,122	(2.5)
네덜란드	1,234	451	162	1,309	1,150	800	5,104	(8.2)	13,775	(10.9)
아일랜드	174	23	15	30	42	614	897	(1.4)	2,076	(1.6)
기타	181	814	178	387	531	888	2,978	(4.8)	4,779	(3.8)
중동지역	226	2	14	66	37	44	390	(0.6)	494	(0.4)
아프리카지역	9	101	24	12	32	13	190	(0.3)	319	(0.3)
기 타	0	0	10	1	1	2	15	(0.0)	15	(0.0)
합 계	11,286	9,093	6,471	12,792	11,563	11,236	62,441	(100.0)	126,748	(100.0)

자료: 산업자원부

〈그림 3-4〉 지역별·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액



주 : 1998-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누계 금액, 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투자실적을 보면, 인수합병을 위한 구주취득이나 신주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형 투자보다 신설형(Greenfield) 투자인 공장설립 혹은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즉 1998년 이전까지 M&A형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신설형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시 M&A형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 신설형 투자 비중은 51.8%에 머물렀다.

〈표 3-4〉 우리나라의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추이

(단위 : 신고기준, 백만 달러, %)

구분	M&A형 투자				Greenfield형 투자			
	구주	인수합병	금액	비중	공장설립	사업장	금액	비중
1998	1,245	3,832	5,077	57.3	464	3,316	3,781	42.6
1999	2,333	2,792	5,125	33.0	3,824	6,595	10,419	67.0
2000	1,277	1,588	2,865	18.8	1,667	10,724	12,391	81.2
2001	1,901	748	2,649	23.5	945	7,692	8,637	76.5
2002	714	1,370	2,084	22.9	840	6,168	7,009	77.1
2003	1,759	1,184	2,943	45.5	552	2,976	3,528	54.5
2004	4,634	1,533	6,167	48.2	2,933	3,693	6,625	51.8
2005	4,966	302	5,268	45.6	1,390	4,905	6,295	54.4
2006	4,188	118	4,306	38.3	2,174	4,756	6,930	61.7

자료: 남광희·윤성훈(2006)

〈표 3-5〉 우리나라의 유형별·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억달러,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6	합계
그린 필드	제조업	14.6	52.6	53.5	13.1	11.0	7.3	35.9	20.1	29.8	8.2	246.1
		(16.7)	(33.9)	(35.0)	(11.6)	(12.1)	(11.3)	(28.1)	(17.4)	(26.5)	(24.3)	(23.4)
	서비스업	22.4	51.5	70.4	73.2	58.9	27.9	30.3	42.9	39.5	15.5	432.5
		(25.5)	(33.2)	(46.2)	(64.9)	(64.9)	(43.1)	(23.7)	(37.1)	(35.2)	(46.1)	(41.1)
M&A	제조업	43.7	31.1	15.3	16.0	12.4	9.7	26.2	10.7	12.7	3.4	181.2
		(49.8)	(20.0)	(10.0)	(14.2)	(13.6)	(14.9)	(20.5)	(9.2)	(11.3)	(10.3)	(17.2)
	서비스업	7.1	20.2	13.3	10.5	8.5	19.8	35.4	42.0	30.4	6.5	193.6
		(8.0)	(13.0)	(8.7)	(9.3)	(9.3)	(30.6)	(27.7)	(36.3)	(27.0)	(19.4)	(18.4)
합계		87.8	155.4	152.5	112.8	90.8	64.6	127.9	115.6	112.3	33.6	1,053.4

자료: 산업자원부(신고기준)

M&A 투자비중 상승으로 적대적 M&A 가능성 및 M&A 이후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 단기간에 투자수익을 회수해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의 효과를 일반적으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6> Greenfield형 투자와 M&A형 투자의 효과 비교

구분	Greenfield형 투자	M&A형 투자
자본유입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동	즉각적으로 유치국에 영향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음	대규모일 경우 즉각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업가격 산정	비교적 용이	기업의 가격산정이 어려움
기술이전 속도	기술직접이전 효과 적음	현존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므로 이전속도 빠름
국내투자 구축효과	높음	낮음

자료: 한국은행(2007)

외환위기 이후 1억달러 미만의 중소규모 투자비중이 상승하였다. 1억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비중이 2002년중 전체의 65.4%에서 2005년중 52.5%로 낮아지고 1억달러 미만 투자비중은 47.5%로 상승하여 투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다.

<표 3-7>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추이

(단위 : 신고기준,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억달러 이상	57.8	64.4	62.6	62.5	65.4	48.8	58.2	52.5
1억달러 미만	42.2	35.6	37.4	37.5	34.6	51.2	41.8	47.5
1천만달러-1억달러 미만	30.8	27.5	25.6	25.1	21.5	33.4	28.3	32.0
1백만달러-1천만달러 미만	9.4	6.6	9.0	9.3	10.4	13.3	11.1	12.1
1백만달러 미만	2.0	1.5	2.8	3.0	2.8	4.5	2.5	3.4

자료 : 산업자원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 및 문화·오락업을 중심으로 1억달러 이상 거액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의 경우 섬유·직물·의복, 의약에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의 중소규모 투자비중이 높았다.

〈표 3-8〉 업종별·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추이

(단위 : %)

투자규모(백만달러)	0-1	1-10	10-50	50-100	100- 500	500이상	합계
제조업	2.0	10.0	17.8	10.9	38.3	20.9	100.0
(섬유·직물·의복)	4.8	12.5	55.8	0.0	26.9	0.0	100.0
(제지·목재)	2.4	25.0	54.5	18.1	0.0	0.0	100.0
(화학)	1.3	8.7	20.9	9.8	37.5	21.8	100.0
(의약)	3.6	29.3	30.4	0.0	36.8	0.0	100.0
(비금속광물)	1.0	5.4	15.9	9.6	68.1	0.0	100.0
(금속)	2.1	6.5	13.3	24.5	53.7	0.0	100.0
(기계및장비)	2.7	10.4	13.9	16.5	13.1	43.4	100.0
(전기·전자)	1.9	9.2	13.3	9.1	39.8	26.7	100.0
(운송용기계)	1.5	10.6	20.7	5.8	44.6	16.7	100.0
서비스산업	3.3	9.7	16.2	8.8	42.8	19.1	100.0
(도·소매)	8.5	13.1	17.5	8.9	45.3	6.6	100.0
(음식·숙박)	1.9	4.1	10.4	9.1	74.5	0.0	100.0
(운수·창고)	3.0	10.0	16.2	17.5	53.2	0.0	100.0
(통신)	2.0	8.7	19.9	17.8	51.6	0.0	100.0
(금융·보험)	0.8	9.3	17.6	8.8	37.5	26.0	100.0
(부동산·임대)	1.4	8.0	22.5	6.9	61.2	0.0	100.0
(사업서비스업)	10.5	27.7	28.5	14.8	18.5	0.0	100.0
(문화·오락)	0.5	1.9	4.7	4.1	32.3	56.5	100.0
합 계	2.7	9.5	16.9	9.7	41.9	19.3	100.0

주 : 1999-2004년 신고기준 누적금액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율 상승 추세이다. 2005년 들어 회수규모가 급증하면서 외국
인직접투자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37%로 상승하였다. 2000-2004년중 도착액 대
비 회수액 비율이 20% 내외였으나 2005년에는 37.0%로 크게 상승한 결과 순투자(도
착액－회수액) 기준 세계 순위는 2004년 16위에서 2005년 27위로 크게 하락하여 문제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3-9〉 외국인직접투자 도착 대비 회수 비중

(단위 : 개, 억달러, %)

구분	도착		회수		회수/도착 비중(%)	
	업체수(개)	금액(억달러)	업체수(개)	금액(억달러)	업체기준	금액기준
1980	112	1.3	21	1.1	18.8	87.4
1990	839	9.0	57	1.4	6.8	15.2
1998	1,175	53.2	88	2.5	7.5	4.7
1999	1,543	109.4	225	13.7	14.6	12.5
2000	3,224	102.4	244	16.2	7.6	15.8
2001	2,557	50.2	223	12.0	8.7	24.0
2002	1,828	37.8	261	7.5	14.3	19.8
2003	2,086	50.5	326	12.4	15.6	24.6
2004	2,541	92.1	240	15.4 ¹⁾	9.4	16.7
2005	3,055	95.3	303	35.2	9.9	37.0

주: 1) 브릿지 증권외의 대주주인 Bridge Investment Holdings가 투자자금 회수, 다임러크라이
슬러가 합작투자회사인 다임러현대상용차(주)의 지분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고 양사
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청산, Lone Star가 GIC에 스타타워를 매각하고 투자자금을 회
수, Asia Cinema Holdings B.V.가 CJ CCV에 투자한 보유지분을 매각

자료 : 산업자원부

3. 충남의 FDI 동향

지역별 외국인 투자금액은 서울, 경기 및 인천의 수도권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90년대 34.5%와 12.9%에서 2000년대에 42.7%와 14.1%를 기록하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1970 - 2006년 동안 약 10배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26.7%의 비중을 보이던 서울이 2000년대에는 55.1%의 비중을 보여 외국인 투자건수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은 1970년대 14억 달러에서 2000년대 713억 달러로 51배 증가하였는데, 투자건수는 10.6배 증가하여 건당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시도별 외국인투자 건수의 추이

(단위 : 건, %)

구분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6		순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전국	1,839	100.0	2,650	100.0	8,552	100.0	19,497	100.0	-	-	-	-
충남	10	0.5	93	3.5	313	3.7	283	1.5	12	7	3	7
서울	251	13.6	707	26.7	4,697	54.9	10,751	55.1	2	1	1	1
부산	56	3.0	86	3.2	259	3.0	503	2.6	5	8	6	4
대구	17	0.9	52	2.0	91	1.1	295	1.5	10	11	11	6
인천	89	4.8	186	7.0	308	3.6	839	4.3	4	4	4	3
광주	0	0.0	12	0.5	51	0.6	192	1.0	15	16	13	9
대전	0	0.0	17	0.6	51	0.6	143	0.7	15	15	13	12
울산	31	1.7	62	2.3	92	1.1	82	0.4	7	10	10	15
경기	183	10.0	638	24.1	1,213	14.2	2,616	13.4	3	2	2	2
강원	2	0.1	20	0.8	64	0.7	105	0.5	13	14	12	13
충북	23	1.3	99	3.7	217	2.5	231	1.2	9	6	7	8
전북	29	1.6	64	2.4	93	1.1	97	0.5	8	9	9	14
전남	11	0.6	30	1.1	50	0.6	162	0.8	11	12	15	11
경북	55	3.0	148	5.6	216	2.5	171	0.9	6	5	8	10
경남	304	16.5	221	8.3	263	3.1	303	1.6	1	3	5	5
제주	2	0.1	23	0.9	41	0.5	48	0.2	13	13	16	16
미정	776	42.2	192	7.2	533	6.2	2,676	13.7	-	-	-	-

자료 : 조택희 · 전일명(2006)

〈표 3-11〉 시도별 외국인투자 금액의 추이

(단위 : 천달러, %)

구분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6	순 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 이후
전국	1,419,915 (100.0)	5,501,389 (100.0)	41,959,260 (100.0)	71,367,833 (100.0)	-	-	-	-
충남	2,528 (0.2)	115,864 (2.1)	2,299,026 (5.5)	4,341,795 (6.1)	13	10	5	3
서울	396,696 (27.9)	1,912,171 (34.8)	14,459,316 (34.5)	30,498,020 (42.7)	1	1	1	1
부산	14,968 (1.1)	424,454 (7.7)	911,949 (2.2)	1,792,928 (2.5)	8	4	14	9
대구	2,847 (0.2)	84,333 (1.5)	181,234 (0.4)	350,787 (0.5)	12	13	16	16
인천	29,476 (2.1)	157,715 (2.9)	1,180,932 (2.8)	3,834,657 (2.8)	6	9	10	4
광주	-	109,301 (2.0)	799,914 (1.9)	959,580 (1.3)	15	11	15	11
대전	-	60,479 (1.1)	1,382,006 (3.3)	630,666 (0.9)	15	15	8	14
울산	65,545 (4.6)	305,443 (5.6)	1,278,834 (3.0)	757,427 (1.1)	4	5	9	13
경기	73,319 (5.2)	769,818 (14.0)	5,403,120 (12.9)	10,367,073 (14.5)	3	2	2	2
강원	105 (0.0)	28,673 (0.5)	980,070 (2.3)	1,891,691 (2.7)	14	16	13	8
충북	11,741 (0.8)	211,973 (3.9)	1,064,196 (2.5)	2,009,376 (2.8)	10	7	12	7
전북	12,524 (0.9)	92,421 (1.7)	1,687,105 (4.0)	534,764 (0.7)	9	12	7	15
전남	29,476 (2.1)	190,767 (3.5)	1,072,088 (2.6)	1,310,404 (1.8)	6	8	11	10
경북	42,424 (3.0)	240,471 (4.4)	3,483,669 (8.3)	2,231,496 (3.1)	5	6	3	6
경남	171,756 (12.1)	433,768 (7.9)	2,732,549 (6.5)	851,356 (1.2)	2	3	4	12
제주	3,972 (0.3)	64,422 (1.2)	2,245,510 (5.4)	3,394,560 (4.8)	11	14	6	5
미정	562,238 (39.6)	299,316 (5.4)	797,742 (1.9)	5,611,033 (7.9)	-	-	-	-

주: ()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조택희 · 전일명(2006)

충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국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투자금액으로 1980년대에 1.1억 달러로 전국의 2.1%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2.2억 달러로 전국의 5.5%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4.3억 달러로 전국적 비중이 6.1%로 상승하였다. 투자금액의 순위도 1970년도에 13위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에 5위 그리고 2000년도에는 3위로 상승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투자건수로는 90년대에 3위를 기록하였다가 2000년대에 7위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충남의 건당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충남의 최근 5년간 투자유치건수 및 금액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004년도 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 총42건으로 안면도 개발을 포함하여 12억 달러(신고기준)의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Greenfield 중심 투자유치전략과 IT, 자동차부품 제조업종 등 맞춤형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규모 첨단제조업인 S-LCD 유치와, 텐소풍성, 네스디스플레이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2005년도는 투자건수가 급속히 신장되었으나 유치금액은 3억달러로 급감하였다. 2006년도는 유치건수는 37를 기록하였으나 유치금액이 1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표 3-12〉 충남의 연도별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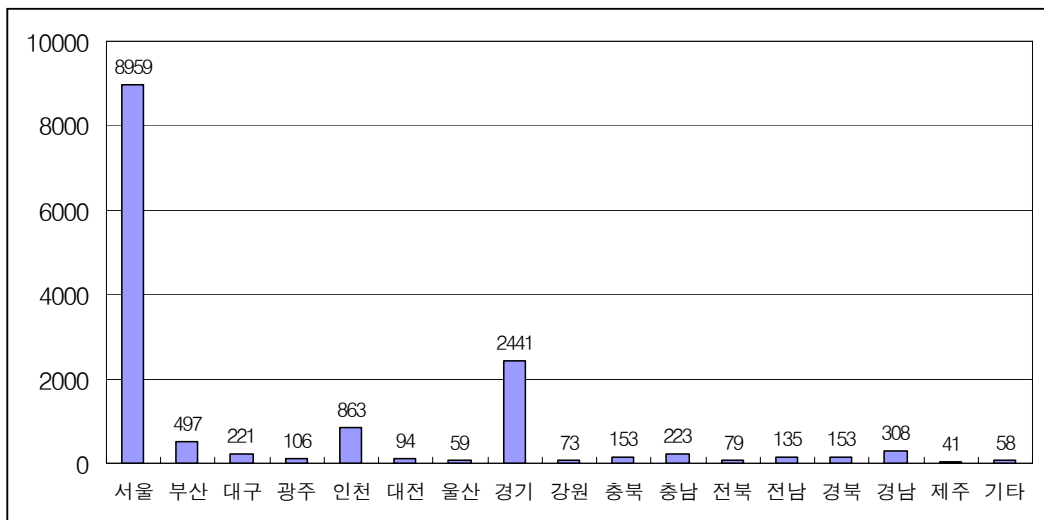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 달러)

지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충남	건수	38	41	26	42	70	37
	유치실적	491	581	701	1,200	329	1,331
서울	건수	—	1,339	1,488	1,483	1,620	—
	유치실적	—	2,266	3,933	5,580	6,853	—
경기	건수	486	318	375	434	457	—
	유치실적	2,087	823	470	1,362	1,033	—
전국	건수	11,286	9,093	2,564	3,073	3,667	3,111
	유치실적	3,344	2,409	6,469	12,786	11,563	11,236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말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14,46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의 순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서 수도권에 외자기업의 85%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23개로서 전국의 1.5%를 차지하였다.

〈그림 3-5〉 외국인투자기업 시도별 현황



자료: 산업자원부

그리고 산업별 분류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3.6%와 75%로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86.6%이고 제조업 비중이 12.3%로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73.5%와 25.2%를 차지하여 충남의 경우 제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3〉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 2006년말 기준

(단위: 업체수, %)

구분	충남		서울		경기		총계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농축수산업 및 광업	0	0.0	14	0.2	9	0.4	54	0.4
제조업	164	73.5	1,103	12.3	961	39.4	3,416	23.6
전기 가스 수도 건설	3	1.3	79	0.9	20	0.8	148	1.0
서비스업	56	25.2	7,762	86.6	1,451	59.4	10,844	75.0
총계	223	100.0	8,958	100.0	2,441	100.0	14,462	100.0

자료: 산업자원부

2006년의 경우 유형별로는 증자가 신규보다 건수나 금액에 있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가별로 일본이 건수와 금액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금액으로는 네덜란드가, 건수로는 중국의 투자가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기타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홍콩, 호주 등에서 크고 작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 연도별 동향을 보면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사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의 경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금액상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고, 석유화학과 기계, 자동차 등에서도 많은 FDI의 유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만달러 이상이 20건이나 되어, 충남의 FDI는 대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14〉 2006년 충남의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천\$)

유형	합계		신규		증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37	1,331,304	11	70,268	26	1,261,036

자료: 충남도정백서

〈표 3-15〉 충남의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 천\$)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기타	합 계
2003	건 수	7	8	3	-	-	-	3	-	9	30
	금 액	91,125	15,477	387,521	-	-	-	186	-	207,367	701,646
2004	건 수	13	12	1	-	-	-	1	-	15	42
	금 액	83,111	967,371	3,000	-	-	-	43	-	147,200	1,200,725
2005	건 수	13	24	4	1	-	-	-	-	28	70
	금 액	105,550	44,167	66,821	76,500	-	-	-	-	36,006	329,044
2006	건 수	4	13	-	2	1	1	6	2	8	37
	금 액	2,239	1,053,451	-	231,065	2,350	2,000	405	3,650	36,144	1,331,304

자료: 충남도정백서

〈표 3-16〉 2006년 충남의 업종별 투자실적

구분	합계	자동차	전기·전자	특수가스	기계	음식숙박	석유화학	기타
계	37	3	5	1	5	2	4	17
	1,331,304	31,452	968,944	5,482	11,194	113	303,739	10,380

자료: 충남도정백서

〈표 3-17〉 충남의 규모별 투자실적

(단위 : 건)

연도	10만달러 미만	10만달러 ~ 50만달러	50만달러 이상 ~ 100만 달러	100만달러 이상 ~ 500만 달러	500만달러 이상	합계
2003	12	6	3	5	4	30
2004	8	7	1	12	14	42
2005	28	13	5	15	9	70
2006	7	9	1	9	11	37

자료: 충남도정백서

민선4기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선 4기 외국인 투자유치 주요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8〉 충남의 민선4기 FDI 주요 실적

구분	일자	내 용
1	7. 19	◦삼성·소니(S-LCD)와 19억 달러(외자 9억 5,000만 달러) 외자유치 MOA체결
2	7. 21	◦미국 포트로닉스사와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협정서(MOA)를 체결 - 천안 테크노파크내 R&D센터 1만 69평에 2010년까지 3억 달러를 투자
3	8. 4	◦ENF테크놀로지사와 2,000만불 투자협정 체결(외국인직접투자 800만 달러) - 아산시 인주면 인주외국인투자지역 8,400평에 800만 달러를 투입해 신규 R&D센터 및 생산라인을 착공, 내년 말 준공 예정 ENF테크놀로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에 필수적인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영국 합작회사
4	8. 16	◦DWFC사와 투자 MOU 체결(600만달러)
5	9. 4	◦프랑스 라파즈사와 당진 부곡산업단지에 5,000만달러 투자 MOU(9.11 유럽순방 외자유치 보고회) - 라파즈사의 충남지역내 투자는 지난 2001년 당진 부곡산업단지(4만3,000평)내 8,000만달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 세계적인 건축자재 회사인 라파즈사는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 등록, 공장 입주계약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당진 부곡산업단지 5만평 부지에 석고보드 및 컴파운드 제품군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건설
6	9. 11	◦유럽순방 외자유치 보고회 - 네덜란드의 알 스미어 화훼경매장과 ASM사(반도체장비제조)와 2,000만불의 MOU를 각각 체결
7	10. 19	◦한·일 합작기업 대산MMA(주)와 투자 MOU체결(1억5,000만달러) - 서산시 독곶리 대산읍 634번지의 롯데 대산유화 공장부지내 1만 5,428평의 부지에 2008년까지 모두 1억5,000만달러(외자 3,750달러)를 투자해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생산 라인을 건설 - 대산MMA(주)의 생산 규모는 MMA가 연간 9만톤,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연간 4만톤 이상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제4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1) 기술적 분석의 활용

먼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다. 기술적인 통계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절대적으로 열위의 상태이다. 2005년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잔액(UNCTAD통계 기준)은 632.0억달러로서 태국(565.4억달러), 말레이시아(477.7억달러), 대만(419.3억달러)보다는 크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절대규모면에서 열위에 있다.

〈표 4-1〉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과 대 명목GDP 비율 추이

(단위 : 억달러, %)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세계	17,685.9	57,860.3	61,977.1	67,036.1	79,870.8	89,021.5	101,297.4
	(8.4)	(18.4)	(19.9)	(20.7)	(22.1)	(21.7)	(22.7)
선진국	14,044.1	39,763.6	42,654.7	48,106.4	58,162.9	64,698.3	71,171.1
	(8.2)	(16.3)	(17.6)	(19.1)	(20.6)	(20.5)	(21.4)
(미국)	3,949.1	12,568.7	13,439.9	13,400.1	13,780.0	14,738.6	16,257.5
	(6.9)	(12.9)	(13.4)	(12.9)	(12.7)	(12.6)	(13.0)
(독일)	1,112.3	2,716.1	2,721.5	2,977.9	3,865.1	3,479.6	5,027.9
	(6.7)	(14.5)	(14.7)	(15.0)	(16.1)	(12.9)	(18.0)
(일본)	98.5	503.2	503.2	781.4	897.3	969.8	1,009.0
	(0.3)	(1.1)	(1.2)	(2.0)	(2.1)	(2.1)	(2.2)
개도국	3,640.6	17,397.3	18,311.1	17,644.7	20,079.6	22,328.7	27,569.9
	(9.5)	(26.5)	(28.4)	(27.0)	(28.3)	(26.4)	(27.0)
(중국)	206.9	1,933.5	2,031.4	2,165.0	2,283.7	2,454.7	3,178.7
	(5.4)	(17.9)	(17.5)	(17.1)	(16.2)	14.9)	(14.3)
(싱가포르)	304.7	1,125.7	1,124.4	1,368.3	1,443.6	1,604.6	1,869.3
	(82.6)	(123.1)	(143.1)	(157.3)	(160.2)	(150.2)	(158.6)
(한국)	51.9	371.9	408.8	438.6	476.4	553.3	632.0
	(2.1)	(7.3)	(9.6)	(9.2)	(9.0)	(8.1)	(8.0)
(대만)	97.4	175.8	380.3	280.6	371.3	390.3	419.3
	(6.1)	(5.7)	(13.5)	(10.0)	(13.0)	(12.8)	(12.1)

주 : ()내는 FDI inward stock/GDP(%)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둘째,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작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조업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인 영국 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4-2〉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제조업의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의 점유율					
	한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매 출	11.6	79.5	36.1	35.9	24.4	2.6
고 용	8.5	49.2	20.4	30.8	16.6	-
부가가치	11.1	86.7	26.8	35.8	-	-

자료 : 산업자원부(2004)

〈표 4-3〉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FDI flows/총고정자본형성		
	2003	2004	2005
세 계	7.3	7.7	9.4
선 진 국	6.4	6.3	8.0
(영 국)	5.8	16.2	45.0
(프 랑 스)	12.5	8.0	15.5
(미 국)	2.6	5.5	4.0
개 도 국	9.3	10.7	12.8
(홍 콩)	40.6	96.4	97.0
(싱가포르)	46.5	58.0	78.9
(말레이시아)	10.8	19.1	15.2
(중 국)	8.6	8.0	9.2
(태 국)	5.7	3.4	7.2
(한 국)	2.1	3.8	3.1
(대 만)	0.8	2.8	2.3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셋째, 소재부품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소재부품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2005년중 각각 약 18%에 그쳐 2001-2005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선진국 및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사업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표 4-4〉 소재부품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투자비중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소재부품산업	13.2	13.6	19.6	33.6	18.3	19.7
지식기반제조업	24.7	23.0	15.1	31.4	18.3	22.5

자료 : 한국은행(2007)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및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국내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은 2002년 370명에서 2005년 412명으로 증가하였다. 100인 이상 기업의 1사당 평균 고용인원은 700명대 수준을 유지(국내기업은 285명 내외 수준)하였다⁶⁾.

6) 한국은행(2007)은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과 한국신용평가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양자가 일치된 기업을 추출(1,177개)하여 동 자료를 토대로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의 경우는 분석대상인 2002-2005년중 고용인원이 있는 기업(922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5〉 1사당 평균 고용인원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370	395	401	412
(제조업)	358	375	378	397
(서비스업)	401	438	451	448
100인이상 외국인투자기업 ¹⁾	707	717	698	706
100인이상 국내기업 ²⁾	284	282	285	-

주: 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종업원수/100인이상 사업체수

2) 국내기업의 경우 통계청의 종사자수/100인 이상 사업체수 로 계산

자료 : 한국은행(2007)

기타 여러 연구원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업연구원(2006)은 2002-2004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9%로서 국내기업의 고용증가율(0.9%)보다 높다고 분석하였다. LG경제연구원(2006)은 2000-2005년중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시산결과 동 기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256만명)의 20%(52만명)가 외국인직접 투자에서 창출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국토연구원(2004)은 제조업 고용중 7.3%(2002년 기준)는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2004)는 국내진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진출당시보다 1사당 평균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형태인 경우 136.7%, 기존기업인수형태인 경우 17.2% 늘어나 그린필드형 신규투자형태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다섯째,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가 시차를 두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 가지 형태의 투자만 발생할 때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설립과 합병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공장설립(22.6%) 또는 합병(14.2%)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고용증가율(2002-2005년 중 34.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7) Calder et al. (2004)에 따르면 M&A 투자와 Greenfield 투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M&A 투자가 1단위 증가하면 Greenfield 투자는 선진국에서 0.97단위, 개도국에서는 1.56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6〉 외국인직접투자기업1)의 고용 증가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2(A)	2003	2004	2005(B)	(B-A)/A*100
공장설립	합계	64,277	68,089	71,226	78,603	22.3
(296개)	평균	217	230	241	266	22.6
합병	합계	63,448	72,921	74,691	72,465	14.2
(125개)	평균	508	583	598	580	14.2
공장설립과 합병	합계	37,238	44,448	48,431	50,046	34.4
(94개)	평균	396	473	515	532	34.3
총합계	합계	164,963	185,458	194,348	201,114	21.9
(515개)	평균	320	360	377	391	22.2

주 : 1) 한국신용평가 및 산업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중 2001년 이후 투자설
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2002~2005 년중 고용인원이 존재하는 기업(515개)을 분석

자료 : 한국은행(2007)

여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국내기업보다 더 높고 수익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성장성면도에서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증가율	외국인투자기업	11.8	10.1	18.3	8.8
	국내기업	7.3	4.0	13.3	4.3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6.4	7.0	7.0	6.1
	국내기업	5.7	6.4	6.8	5.9
매출액 경상이익률	외국인투자기업	5.3	5.4	7.9	6.7
	국내기업	4.3	4.8	7.0	6.2

주 : 1)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목록과 한국신용평가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양자가 일치된 기업을 추출(1,177개)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대상인 연간매출액 25억원 이상인 4,738업체

자료 : 한국은행(2007)

2) 산업연관표의 활용연구

재정경제부(2006)은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생산유발 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의 변화가 발생할 때,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산출물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계산된다.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 분석과 생산 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2006)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8>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후방연관효과로 나누어 산업별로 정리한 결과이다⁸⁾. 1995-1999년과 2000-2003년 기간에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산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2000-2003년 중에는 제조업에 8조원이 투자되었는데 생산유발액은 약 16조원이었고, 서비스업에는 9조 3천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약 14조의 생산이 유발되었다.

<표 4-8>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액

(단위 : 10억 원,%)

구 분	1990-1994	1995-1999	2000-2003
1차 산업	후방	후방	후방
	10.2	87.1	9.2
제조업	(0.2)	(0.2)	(0.0)
	1,818.7	25,625.4	16,251.3
서비스업	(37.8)	(62.0)	(53.1)
	2,987.4	15,611.4	14,370.6
계	(62.0)	(37.8)	(46.9)
	4,816.2	41,323.8	30,631.1

자료: 재정경제부(2006)

이렇게 2000-2003년 기간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 많이 이뤄졌

8) 후방연관효과는 어떤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더 많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9〉 28개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액

(단위 : 10억 원)

구 분		1990-1994	1995-1999	2000-2003
1	농림수산물	0.0	43.6	5.2
2	광산물	10.2	43.5	4.0
3	음식료품	284.5	4,203.7	425.2
4	섬유 및 가죽제품	52.7	203.5	705.8
5	목재 및 종이제품	72.5	1,668.8	88.0
6	인쇄, 출판 및 복제	3.1	147.1	145.9
7	석유 및 석탄제품	2.0	734.2	105.9
8	화학제품	311.7	2,554.5	2,477.8
9	비금속광물제품	80.7	751.8	1,014.8
10	제1차금속	32.8	2,531.8	350.6
11	금속제품	19.4	90.5	83.3
12	일반기계	297.6	2,556.1	4,380.3
13	전기 및 전자기기	366.1	7,830.7	3,317.5
14	정밀기기	36.0	472.3	97.8
15	수송장비	252.1	1,852.6	2,894.2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7.5	27.7	164.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	651.4	749.2
18	건설	19.8	208.0	557.7
19	도소매	2,207.9	5,217.6	2,351.8
20	음식점 및 숙박	84.4	169.2	129.1
21	운수 및 보관	35.0	239.0	1,027.9
22	통신 및 방송	6.6	683.1	1,331.4
23	금융 및 보험	306.8	6,877.7	5,215.6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7.1	1,453.0	2,452.0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	0.2	0.1
26	교육 및 보건	3.2	29.6	55.5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56.7	82.5	500.4
28	기타	0.0	0.0	0.0
	합계	4,816.2	41,323.8	30,631.1

자료: 재정경제부(2006)

<표 4-9>에는 28개 업종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유발액이 정리되어 있다. 2000-2003년 중 금융·보험, 일반기계와 전기·전자의 순위로 생산유발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는 <표 4-10>에 요약되어 있다. 산업별로 볼 때 1차 산업의 취업유발인원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대부분의 취업인구유발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2003년 중에는 제조업에 8조원이 투자되었는데 취업유발인원은 약 11만명이고, 서비스업에는 9조 3천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약 19만명의 취업이 유발되었다. 즉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이 3기간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10>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단위 : 명, %)

구 분	1990-1994	1995-1999	2000-2003
1차 산업	320	3,139	245
	(0.1)	(0.4)	(0.1)
제조업	50,372	345,728	112,784
	(21.2)	(43.4)	(37.3)
서비스업	187,094	447,528	189,260
	(78.7)	(56.2)	(62.6)
계	237,786	796,396	302,289

자료: 재정경제부(2006)

<표 4-11>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을 28개 업종별로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2000-2003년 중 도소매업, 금융·보험 및 일반기계 순위로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한 취업유발계수의 추정에는 산업연관표 자체의 문제와 이 문제로 인한 산업연관표 분석을 이용한 분석에 한계점이 있어 해석시 주의가 요청된다. 첫째, 산업연관표 자체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어진 특

정 시점(연도)에서의 산업연관 관계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매 5년마다 발표되어 연도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직접투자의 장기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직접투자의 투자금액을 최종 투자지출로 보는데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투자자금의 일부분이 건물 및 토지 등에 투자되어 최종 지출의 증가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투자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셋째, 취업 및 노동계수가 크기 때문에 시장개방을 통한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노동계수가 크다는 점은 역으로 말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므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반경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의 결과는 국내 기업의 반경쟁 효과에 의한 고용 감소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이는 직접투자의 국내 경제에 대한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주게 된다.

〈표 4-11〉 28개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취업유발인원

(단위 : 명)

구 분		1990-1994	1995-1999	2000-2003
1	농림수산물	0	2,508	215
2	광산물	320	630	30
3	음식료품	13,349	102,159	7,251
4	섬유 및 가죽제품	1,958	4,313	7,322
5	목재 및 종이제품	1,723	21,093	671
6	인쇄, 출판 및 복제	104	2,697	1,660
7	석유·석탄제품	17	2,306	124
8	화학제품	6,800	28,092	14,021
9	비금속광물제품	2,157	10,144	7,276
10	제1차금속	450	17,298	1,235
11	금속제품	446	1,145	716
12	일반기계	7,480	32,615	32,923
13	전기전자기기	9,278	95,944	19,466
14	정밀기기	1,117	7,650	922
15	수송장비	5,228	19,714	17,346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66	557	1,85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	4,988	2,847
18	건설	544	3,261	5,844
19	도소매	149,907	211,933	70,595
20	음식점 및 숙박	12,398	19,207	3,262
21	운수 및 보관	1,289	4,753	13,228
22	통신 및 방송	152	9,374	8,004
23	금융 및 보험	10,519	170,602	55,749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271	19,269	18,062
25	공공행정 및 국방	0	5	1
26	교육 및 보건	164	738	949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4,849	3,397	10,720
28	기타	0	0	0
	계	237,786	796,396	302,289

자료: 재정경제부(2006)

3) 회귀식 모형

외국인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패널회귀모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Aitken and Harrison, 1999, Blomström and Sjöholm, 1999 등). 재경부(2006)은 다음의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y_{it} = \beta_0 + \beta_1 x_{it} + \beta_2 Own_t + \eta_t + \alpha_i + \Delta \epsilon_{it}$$

여기서 y_{it} 는 종속변수로 로그 생산량이며, 독립변수는 투입요소 벡터인 x_{it} 와 외국인 소유지분율 Own_t 로 구성되어 있다. η_t 와 α_i 는 각각 시간과 기업특성(time- and firm-specific)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ϵ_{it} 는 오차항이다. η_t 는 생산에 있어서 기술진보와 같은 개별기업에 주는 공동의 충격이나 시간효과에 변동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을 나타낸다. 또한 α_i 는 각각의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의미한다.

Own_t 는 생산성 증대효과(Own_{ijt})와 파급효과(Own_{j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첫째, 다국적기업 해외자 회사의 성과가 국내기업의 성과보다 좋다. 둘째, 산업내 외국인 소유지분율은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즉, 국내기업에 파급효과를 준다. Own_{ijt} 는 t 기에 j 산업 i 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율을 나타내며 이는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소유된 주식의 정도(0%-100%)를 의미한다. Own_{jt} 는 t 기에 j 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율을 나타낸다. 만약 기업내 외국인 소유지분율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Own_{ijt} 의 계수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하며 외국기업의 생산성 이점이 국내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확장하기 위해선 Own_{jt} 의 계수값 역시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업 자료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지분율(Own_{ijt})의 계수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산업내 외국인 소유지분율(Own_{jt})은 각

9) 만약 외국인 직접투자 행위가 생산성 증가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되는 경향 즉,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이 내생성의 가능성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 이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우월한 외국의 경영기법이나 마케팅 기법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상승시키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추정 결과 산업내 파급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내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패널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고정	확률	고정	확률
log(자본)	0.353 (24.62)**	0.379 (30.85)**	0.352 (24.61)**	0.379 (30.99)**
log(재료비용)	0.653 (42.90)**	0.610 (45.87)**	0.653 (42.96)**	0.607 (45.74)**
외국인 소유지분율 (Own_{ijt})	0.004 (3.28)**	0.004 (3.75)**	0.003 (2.28)*	0.003 (2.65)**
산업내 외국인 소유지분율(Own_{jt})	- -	- -	0.015 (3.63)**	0.014 (3.92)**
상수항	1.677 (17.70)**	1.818 (19.26)**	1.626 (17.02)**	1.774 (18.68)**
관 측 수	3374	3374	3374	3374
기 업 수	568	568	568	568
전체 R^2	0.66	0.67	0.66	

주: 괄호안은 z-통계량이며 *, **는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2006)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김군수(2006)은 외국인 투자의 전후방연계분석을 위해 단일지역 지역산업연관모형과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외국인 투자의 효과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이다. 취업계수는 선박(6.15명/10억원), 도소매업(5.24명/10억원), 가죽 및 모피(3.70명/10억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3.27명/10억원), 음식업 및 숙박업(3.446명/10억원)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다 높게 계산되었다. 생산유발 효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이 가장 크고(2.851), 다음으로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2.499),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2.481)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외국인투자의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경기도

산업	취업계수		산업	생산유발계수	
	명/10억원	순위		계수	순위
선박	6.1507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156	1
도소매	5.2405	2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2.4998	2
가죽 및 모피	3.7072	3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2.4811	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4707	4	자동차 및 부분품	2.4344	4
음식점 및 숙박	3.4466	5	펄프 및 종이	2.3134	5
운수 및 보관	3.1182	6	전자표시 장치 및 반도체	2.3051	6
농림수산업	2.7703	7	의료 및 측정기기	2.2738	7
기타 섬유사	2.2298	8	기타	2.2692	8
도자기 및 점토제품	2.1518	9	광학기기 및 시계	2.2316	9
교육 및 보건	2.1323	10	가정용 전기기기	2.2035	10

자료: 김군수(2006)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 수록 영향력계수가 크고, 감응도계수가 큰 산업일 수록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영향력계수가 큰 산업의 순위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1.559)과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제조업(1.384),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1.373)이다. 감응도가 높은 산업의 순위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977), 비철금속 및 1차제품(2.533) 및 농림수산업(2.480)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미치는 효과이다. 경기도는 2002-2005년 중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4조원 유입되었는데 그 결과 전국적으로 8만 3천여명과 경기도내에서 5만 7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났고, 충남지역에는 1,543명의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4〉 경기도 외국인설비투자에 의한 지역별 유발 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지역	생산유발	고용유발	지역	생산유발	고용유발
서울	1,433,735	11,034	강원	212,060	1,400
부산	238,530	1,672	충북	247,098	1,424
대구	61,053	498	충남	311,879	1,543
인천	679,453	3,374	전북	115,737	723
광주	33,984	275	전남	161,280	697
대전	142,173	872	경북	101,586	594
울산	112,570	373	경남	102,653	635
경기	5,718,143	57,605	제주	9,003	80

자료: 김군수(2006)

조택희·전일명(2006)은 지역경제 거시모형을 이용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충북의 거시모형은 산업별 생산, 산업별 고용, 물가, 금융, 재정 및 해외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거시모형의 추정치를 활용해서 모의실험(simulation)을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을 때 충북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투자가 10%p 증가하면 충북의 GRDP의 성장률은 5년 동안 연평균 0.05%p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의 취업자수는 1차년도에 0.01%에서 5차년도 0.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충북고용인구 43만 9천명의 0.01%인 439명이 1차 연도에 신규고용으로 유발되며 5차 년도에는 3,073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5년간 연평균 2,915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4-15〉 외국인 직접투자 10% 증가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효과

(단위 : %p)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기간 평균
GRDP	0.090	0.027	0.043	0.052	0.057	0.054
고용	0.014	0.037	0.058	0.066	0.073	0.050

자료: 조택희 · 전일명(2006)

3.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충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도 충청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추정할 수 있다. 2006년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억 3천만 달러이고 업종별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2006년의 평균 원/달러 환율이 955.51이므로 대략 1조 2,717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2006년도에 충남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6〉 2006년 충남 업종별 투자실적

(단위 : 천 달러)

구분	합계	자동차	전기·전자	특수가스	기계	음식숙박	석유화학	기타
계	37	3	5	1	5	2	4	17
	1,331,304	31,452	968,944	5,482	11,194	113	303,739	10,380

자료: 충남도정백서(2006)

한국은행의 충청지역 산업연관표(2007)를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업종구분은 자동차는 수송장비(15)로 석유화학은 화학제품(8)으로 하였다. 2006년도 1조 2,717억원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생산은 1조

6,211억원 증가하였고, 취업자와 고용은 각각 7,240명과 6,556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⁰⁾.

업종별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9,926억원) 화학제품(3,591억원) 및 수송장비(361억원)의 순위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4,027명)와 화학제품(1,064명)이 1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생산유발액은 작았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취업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보건(403명), 음식점 및 숙박(287명) 및 운수 및 보관(243명)의 취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0) 취업자에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고용에는 임금근로자만 포함된다.

〈표 4-17〉 2006년 충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산 업	생산유발액 (백만 원)	취업효과(명)	고용효과(명)
1	농림수산물	2,178	119	8
2	광산품	814	3	3
3	음식료품	3,707	14	11
4	섬유 및 가죽제품	2,306	19	17
5	목재 및 종이제품	5,967	21	20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32	19	14
7	석유 및 석탄제품	9,950	3	3
8	화학제품	359,199	1,064	1,050
9	비금속광물제품	9,449	39	37
10	제1차금속	17,897	33	32
11	금속제품	3,253	27	23
12	일반기계	14,800	79	74
13	전기 및 전자기기	992,674	4,027	3,973
14	정밀기기	3,030	16	15
15	수송장비	36,124	113	111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892	7	6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1,786	37	37
18	건설	1,692	19	18
19	도소매	4,749	214	81
20	음식점 및 숙박	9,787	287	123
21	운수 및 보관	12,686	243	164
22	통신 및 방송	7,597	34	31
23	금융 및 보험	17,796	172	170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915	170	135
25	공공행정 및 국방	373	4	4
26	교육 및 보건	24,383	403	369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796	54	27
28	기타	28,903	0	0
	합계	1,621,135	7,240	6,556

다음으로 충남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시적 자료를 사용해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자원부의 2006년 외국투자기업현황에서 충남도 소재 외투기업의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 기업 중 (주)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에 기업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104개의 충남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서 충남도 소재 국내 제조업체로서 「Kis-Line」에 기업정보가 수록된 836개의 기업의 데이터도 사용하였다. 104개의 충남 소재 외투기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설립연도는 주로 1999년 이전이고 2000년 이후는 18개 업체이다. 외국인 지분률은 평균 59.7%인데 50% 이상인 기업의 수가 56개이다. 외국인 투자액은 평균 330만 달러이고 천만 달러가 넘는 업체도 31개이다.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이다.

〈표 4-18〉 충남 외투기업의 특성

구 분		업체 수	평균
설립연도	1989년 이전	41	-
	1990-1999년	45	
	2000년 이후	18	
외국인 지분율	20% 미만	15	59.7%
	21 - 49%	34	
	50 - 89%	18	
	90 - 100%	38	
외국인 투자액	40만 달러 미만	21	330.5만 달러
	41만 -200만 달러 미만	20	
	201만 -1000만 달러 미만	32	
	1001만 달러 이상	31	
업 종	제조업	97	-
	비제조업	7	

충남소재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기초정보가 <표 4-19>에서 <표 4-25>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표의 기술적 통계치를 통해서 보면 충남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량과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사당 평균고용인원은 2000-2006년 중 국내기업에 비해 대략 100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한국은행(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수익성이 외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투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아서 외투기업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로 성장성을 판단할 때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에 우열을 판단할 수 없고, 투자효율성에서도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섯째,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배당률은 높고 사내유보율은 낮아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4-19>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고용량 (명)	외투기업	286.0	275.3	252.4	269.7	262.8	275.0	290.5
	국내기업	170.0	165.0	174.4	175.3	176.8	177.3	194.1
매출액 (억원)	외투기업	1,666.1	1,589.0	1,324.9	1,324.3	1,668.6	2,085.7	2,543.4
	국내기업	546.3	549.3	547.2	574.1	675.0	794.2	913.9
수출 (억원)	외투기업	960.4	886.5	851.4	1,079.8	1,291.2	1,329.0	1,522.2
	국내기업	290.2	317.2	396.6	447.0	579.7	675.2	757.9

〈표 4-20〉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수익성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총자본경상 이익률	외투기업	7.0	7.4	7.3	7.5	9.7	8.9	7.1
	국내기업	6.7	5.7	5.4	5.8	6.0	4.9	3.8
자기자본순 이익률	외투기업	16.4	11.6	17.6	11.2	15.7	11.7	9.4
	국내기업	15.4	14.7	5.3	12.0	12.0	9.7	5.7
매출액경상 이익률	외투기업	3.0	0.3	3.1	-32.5	4.5	1.1	-2.3
	국내기업	0.8	-32.8	-7.1	-57.5	-4.0	-3.0	-2.3
매출액영업 이익률	외투기업	4.8	2.2	4.6	-23.7	5.6	3.2	2.4
	국내기업	4.4	-24.0	-3.4	-15.1	-2.4	-1.0	-0.6

〈표 4-21〉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안정성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자기자본 비율	외투기업	40.9	42.1	47.0	47.8	49.8	51.7	53.1
	내기업	37.5	39.2	40.4	41.3	41.7	42.8	43.2
부채비율	외투기업	201.1	2378.4	172.5	178.0	165.5	176.9	141.3
	국내기업	273.2	610.6	379.0	513.4	341.9	339.8	256.5

〈표 4-22〉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성장성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총자산증가율	외투기업	30.7	16.4	28.3	20.8	25.2	22.5	13.4
	국내기업	57.0	242.0	29.1	37.5	23.7	19.3	20.0
매출액증가율	외투기업	76.4	52.0	107.9	45.5	182.4	89.8	15.6
	국내기업	113.3	176.7	76.9	50.6	232.8	54.1	28.7
유형자산증가율	외투기업	80.8	58.2	1034.2	26.6	79.6	29.3	6.2
	국내기업	202.5	333.0	272.4	257.5	67.7	25.7	133.7

〈표 4-23〉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과 투자효율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부가가치율	외투기업	25.0	36.3	28.2	23.4	29.6	22.6	26.3
	국내기업	25.6	8.5	24.7	19.6	23.8	23.4	23.6
총자본투자효율	외투기업	30.1	31.9	31.1	32.3	37.6	34.4	32.1
	국내기업	35.0	33.6	33.8	33.8	34.2	32.0	28.8
설비투자효율	외투기업	107.8	148.5	107.2	104.2	137.7	133.1	149.4
	국내기업	130.4	174.1	191.0	147.4	139.2	135.9	144.4

〈표 4-24〉 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배당율	외투기업	683.2	45.6	148.2	159.6	161.0	113.0	91.0
	국내기업	209.2	75.3	56.8	67.6	71.1	45.6	40.6
배당성향	외투기업	36.8	39.8	41.1	53.1	54.3	43.0	45.3
	국내기업	34.8	75.6	33.8	40.5	41.8	48.1	49.0
사내유보율	외투기업	87.1	85.7	88.4	84.5	83.6	88.8	88.9
	국내기업	93.1	92.6	94.1	93.4	93.6	94.6	93.6

〈표 4-25〉 충남 내국기업과 외투기업의 차이성 검정결과: t -검정

	2003	2004	2005
고용량	2.4349* (0.01)	2.8372* (0.00)	2.5707* (0.01)
매출액	2.4915* (0.01)	2.5306* (0.01)	2.6558* (0.00)
수출	1.2534 (0.21)	1.0936 (0.27)	1.0901 (0.27)
부가가치	1.7545 (0.08)	0.3210 (0.74)	0.1330 (0.89)
총자본경상이익률	2.5283* (0.01)	2.7552* (0.00)	2.1627 (0.03)
자기자본순이익률	0.7917 (0.42)	0.5522 (0.58)	1.0588 (0.29)
매출액경상이익률	0.8074 (0.41)	0.5148 (0.60)	-0.0012 (0.99)
매출액영업이익률	0.7826 (0.43)	0.6655 (0.50)	0.7307 (0.46)
자기자본비율	3.4477* (0.00)	3.8249* (0.00)	4.0882* (0.00)
부채비율	-1.3113 (0.19)	-1.0029 (0.31)	-2.8218* (0.00)
총자산증가율	0.2349 (0.81)	0.7218 (0.47)	-1.3032 (0.19)
매출액증가율	0.2096 (0.83)	0.4030 (0.68)	-0.6339 (0.52)
유형자산증가율	-0.1224 (0.90)	0.6784 (0.49)	-0.9062 (0.36)
부가가치율	1.3372 (0.18)	-0.2169 (0.82)	0.7644 (0.44)
총자본투자효율	1.2406 (0.21)	0.7733 (0.43)	1.2588 (0.20)
설비투자효율	-0.0409 (0.96)	-0.0589 (0.95)	0.0803 (0.93)
배당율	1.4393 (0.15)	2.1937 (0.02)	1.9230* (0.05)
배당성향	1.2717 (0.20)	-0.3664 (0.71)	-0.1305 (0.89)
사내유보율	-4.9249* (0.00)	-3.7193* (0.00)	-2.4113* (0.01)

주: *는 5%에서 유의적인 경우이다.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과 만족도 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특성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주요 연구로는 차미숙·정윤희(2002)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이용해서 충남소재 외자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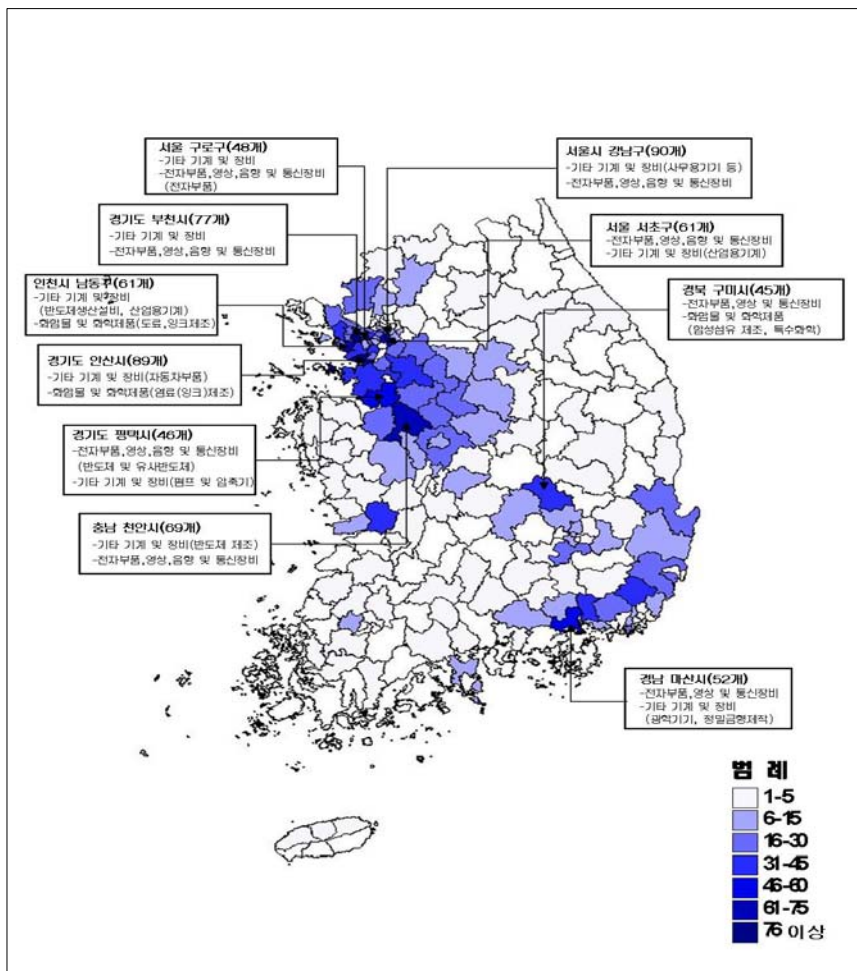
차미숙·정윤희(2002)이 발견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등 중심도시 및 대도시의 선호경향이 크다. 수도권 집중분포가 뚜렷하여, 국내 FDI기업의 87.8%, 투자액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분포하고 동남권에 기업수와 투자액의 5.8%와 10%에 분포하고 중부권에 기업수와 투자액의 3.8%와 11.9%가 분포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입지분포의 격차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부지역과 일부업종의 집적강화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기계, 전자부품 및 화합물 등의 업종에서 집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동종·관련업체 집적지역과 유사하다. 제조업 FDI기업의 상위10위 집적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서초구, 인천시 남동구, 경남 마산시,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평택시, 경북 구미시 등이다.

셋째, 제조업 FDI기업의 계획입지내 선호경향 뚜렷하다. 제조업 FDI기업의 1/4인 23.5%(613개소)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계획입지내에 분포하여, 국내 제조업의 계획입지 분포(13.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차미숙·정윤희(2002)은 설문조사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기업의 입지행태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외투기업이 “단계적·점진적인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밟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입지특성의 또 다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가

주요 입지결정요인으로 포착되었다. 제조업 FDI기업들의 입지결정에는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단계적 및 점진적인 입지이동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FDI기업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에 따른 위험 최소화

〈그림 5-1〉 제조업 FDI기업의 지역집적 및 상위집적지역(공장수 기준)



자료: 차미숙 · 정윤희(2002)

를 위해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을 위해 중심도시 및 대도시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다가, 생산활동 확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지방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나 계획입지로 이동하는 단계적, 점진적인 입지이동경향을 보인다.

셋째,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 시책(account management) 추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미숙·정윤희(2002)은 외국인직접투자 제조기업의 지역연계 실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지역내 원부자재 및 물자구매비율이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지역내(해당시도) 구매비율이 15.2%에 불과하며, 해외(수입)조달비율은 33.6%로 지역내 연계보다 해외와의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활동 의사결정에 해외모기업과의 협의 및 합의절차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도권내 사업지원 서비스업체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2/3이상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 금융 및 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를 수도권의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지역내 생산직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의 평균고용규모가 117명으로 국내 제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큰 편이며, 지방 FDI기업이 수도권 FDI기업 비해 약 1.8배의 고용규모를 보였다. FDI기업들은 생산직 인력의 대부분을 해당 시·도나 시·군 내에서 수시 조달하며, 전문직·관리직은 전국적 수준에서 공채 등에 의해 충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기술이전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 가운데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며, 기술이전활동에 있어서도 생산공정개선, 기존제품 개량수준이 대부분으로 핵심기술 등의 이전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행태를 보였다. 다섯째, 지역내 기업 및 기관과의 교류활동연계가 저조한 편이다. 조사업체들은 지역내 혹은 산업단지내 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과 단순친목 위주의 교류를 주로 행하며, 실질적인 수준의 지역사회연계 활동은 저조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지역화를 표방하나, 실질적인 지역사회연계 보다는 환경캠페인, 장학사업 등 지역내 이미지 제고차원의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내 FDI기업들은 지역연계의 가설적 형태에 있어서 발전적 모형

(developmental model) 보다는 의존적인 모형(dependency model)의 지역연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¹¹⁾. FDI기업의 유치 및 정착지원을 통해 지역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차미숙·정윤희(2002)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였는데 <표 5-1>에 요약되어 있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선별적 유치전략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기업 유치일변도 유치시책에서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투자업체의 관리시책의 병행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선별적이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간 협력적 연대를 통해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형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입지 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대기업의 집중유치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FDI기업의 지역내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사전과급효과분석 및 이에 상응한 차등보조금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내 기술이전 확산을 위해 기술이전보조금, 기술혁신보조금 등의 제공이 요구되고 지역낙후도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방이전보조금 등 보조금 신설 및 확대제공 등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산업육성시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업종선별 및 차등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발전전담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11) Turok(1993)은 외투기업과 지역내 업체간의 관계유형에 따라 발전모형과 의존모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발전모형(development model)은 외투기업과 지역내 업체간에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협력적·기술적인 형태로서,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긴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화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의존모형(dependency model)에서 외투기업은 비용최소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여 지역기업과의 하청관계 등 외투기업과 지역기업간에 불평등 교역관계를 주로 형성한다. 단기계약위주로 지역기업과 약한 유연성 정도를 지니며, 수직적인 통제에 의해 지역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5-1〉 외투업체 입지분석특성의 정책적 시사점

구 분	주요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외국인 직접투 자기업 투자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투자규모의 급팽창 (GDP대비 9.7%수준) - 1998년이후의 투자규모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63.4%(업체), 62%(투자액)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생산거점형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장·관료 개척형, 기술교류형 업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 육성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 육성정책 지속추진 - 투자동기 변화,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산업 연계육성 전략 수립 필요
외국인 직접투 자기업 입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분표와 집중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집중도: 제조업체 본사의 69.9%, 서비스업 본사의 92%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심화(수도권집중지수: 1990~97년 2.15→1998년이후 2.89로 심화(제조업)) ○ 일부업종 및 지역의 집적지속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전자부품, 화학물 등이 주요 업종이며, - 국내동종·관련업체 집적지역과 유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상위집적지역의 집적강화현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심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격차 요인 대두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육성 및 지역발전정책의 병행 추진필요 ○ 유형별 입지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유치정책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지방의 차별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전략 • 수도권: 기존업체관리 및 확대투자 유도정책 • 지방: 대기업의 집중유치추진(지방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 수도권·지방의 외국인투자 유치연계협력 촉진, 지원 • 신규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실시간 입지정보 제공(부동산정보업체연계) -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및 입지지원정책 지속추진
외국인 직접투 자기업 유형별 입지행 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규모, 조직, 투자속성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특성, 투자형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님(수도권 선호경향이 조직유형별 속성상의 입지형태 차이 상해) ○ 입지결정요인 및 계획입지 선호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결정요인으로 대도시 및 고객업체 근접성, 교통편의, 저렴한 공장용지 등이 핵심요인 작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 지방 입지지원정책 효과 ○ 단계적인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초기에 정보부족, 투자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영업, 판매를 위해 서울입지, 생산활동 확대시 지방이전 경로채택 	
외국인 직접투 자기업 유형별 지역연 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지역내 구매연계와 높은 해외의존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물자조달율(15.2%) 수준이 낮은 편 - 물자조달, 판매비율, 기술개발관련 정보구득에 있어 해외의존경향이 높음 ○ 강한 수도권지향의 서비스연계 ○ 제한적인 기술이전효과 ○ 높은 지역고용창출효과(생산인력 위주) ○ 낮은 지역사회기관 교류 및 단순 친목활동 위주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종합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모형보다는 의존모형(dependency model) 성향 - 성숙기업형, 기술교류형 업체의 지역내 전후방연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지역연계 발전모형(developmental model)으로의 전환 가능성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유치시스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급효과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유치 전략(사전과급효과 분석, 차등보조금 지급 등) ○ 지역산업육성정책과 병행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중점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 병행 - 지역내 기업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지원 • 기술개발협력보조금 지원 ○ 지역발전추진기구 구축과 기업활동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서비스, 주거·교육, 문화시설기반 등 조성

자료 : 차미숙·정윤희(2002)

2. 충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특성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충남도 소재 외투기업 수는 224개로 조사되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87개였던 외투기업수가 7년 동안에 138개 증가하였다. 충남 외투기업의 입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24개 외투기업 중 천안에 47%인 106개가 소재하고 있고, 아산시에는 16.7%가 소재하고 있어 천안시와 아산시에 63.4%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99년 말 기준의 73.5% 보다는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2004년을 제외하고는 천안시가 외투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24개로 업체수는 3위를 차지하였지만 주로 도소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10개 미만의 외투기업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에는 외투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등록 연도 추이: 시군별

시군	1999년 이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년 업체수
천안시	46	7	6	9	9	3	11	9	6	106
예산군	2	1	0	1	0	0	1	1	1	7
홍성군	1	0	1	0	0	0	1	0	0	3
아산시	18	1	0	1	4	3	4	1	4	36
공주시	2	0	1	0	1	15	3	0	2	24
논산시	0	0	0	0	0	2	0	0	0	2
당진군	3	0	2	1	2	2	0	0	2	12
부여군	0	0	1	0	1	0	0	1	0	3
서산시	3	1	0	0	1	1	0	1	0	7
보령시	3	1	0	0	0	0	0	1	0	5
연기군	6	1	2	0	2	0	0	1	2	14
금산군	2	0	0	0	0	0	0	0	0	2
청양군	1	0	0	0	0	0	0	0	0	1
태안군	0	0	0	0	0	0	1	1	0	2
서천군	0	0	0	0	0	0	0	0	0	0
계	87	12	13	12	20	26	21	16	17	224

자료: 산업자원부

둘째, 충남소재 외투기업의 업종별분포를 보면 도소매업(41개), 화학제품(36개), 전기전자(35개), 수송장비(30개) 및 일반기계(24개)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인 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및 일반기계의

〈표 5-3〉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

산 업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군	부여군
농림수산물	0	0	0	0	0	0	0	0
광산품	0	0	0	0	0	0	0	0
음식료품	2	1	0	3	0	0	0	0
섬유 및 가죽제품	0	0	0	1	0	0	0	0
목재 및 종이제품	1	0	0	0	0	0	0	0
인쇄, 출판 및 복제	0	0	0	0	0	0	0	0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0	0	0	0	0
화학제품	14	4	1	9	2	0	0	0
비금속광물제품	2	0	0	1	0	1	1	1
제1차금속	1	0	0	1	0	0	3	0
금속제품	2	0	0	1	0	0	0	0
일반기계	20	0	0	2	1	1	0	0
전기전자기기	21	0	0	6	2	0	1	0
정밀기기	1	0	0	0	1	0	0	0
수송장비	14	2	0	7	0	0	3	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3	0	2	2	0	0	0	0
전력, 가스 및 수도	0	0	0	0	0	0	1	0
건설	1	0	0	0	0	0	0	0
도소매	16	0	0	1	16	0	2	2
음식점 및 숙박	2	0	0	0	1	0	0	0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0	0
통신 및 방송	0	0	0	1	0	0	0	0
금융 및 보험	1	0	0	0	1	0	0	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	0	0	0	0	0	0	0
교육 및 보건	1	0	0	1	0	0	0	0
기타	2	0	0	0	0	0	1	0
합계	106	7	3	36	24	2	12	3

자료: 산업자원부

집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시에 화학제품(14개), 전기전자(21개), 수송장비(14개) 및 일반기계(20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아산시에도 화학제품(9개), 전기전자(6개) 및 수송장비(7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주시에도 소매업의 외투기업이 16개가 위치하고 있다.

〈표 5-4〉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 분포: II

산 업	서산시	보령시	연기군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계
농림수산물	0	0	0	0	0	0	0
광산물	0	0	0	0	0	0	0
음식료품	0	0	1	0	0	0	7
섬유 및 가죽제품	0	1	0	0	0	0	2
목재 및 종이제품	0	0	0	1	0	0	2
인쇄, 출판 및 복제	0	0	0	0	0	0	0
석유 및 석탄제품	1	0	0	0	0	0	1
화학제품	3	1	0	1	1	0	36
비금속광물제품	0	1	1	0	0	0	8
제1차금속	0	0	0	0	0	0	5
금속제품	0	1	0	0	0	0	4
일반기계	0	0	0	0	0	0	24
전기전자기기	0	0	5	0	0	0	35
정밀기기	0	0	1	0	0	0	3
수송장비	1	0	3	0	0	0	3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	0	0	0	0	0	7
전력, 가스 및 수도	1	0	0	0	0	0	2
건설	0	0	0	0	0	0	1
도소매	0	1	1	0	0	2	41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3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0
통신 및 방송	0	0	0	0	0	0	1
금융 및 보험	0	0	1	0	0	0	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	0	0	0	0	0	3
교육 및 보건	0	0	0	0	0	0	2
기타	0	0	1	0	0	0	4
합계	7	5	14	2	1	2	224

자료: 산업자원부

<표 5-6>와 <표 5-7>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업종별 외투기업체 수가 정리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제조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수가 많은 업종의 순위가 전기전자(296), 화학제품(189), 일반기계(146) 및 섬유 및 가죽제품(115)이다. 경기도의 경우 제조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수가 많은 업종의 순위가 전기전자(296), 일반기계(191), 화학제품(125) 및 수송장비(70)이다. 서울과 경기도와 비교해서 충남도의 경우 화학제품과 수송장비의 비중이 높고, 전기전자의 비중은 유사하며 일반기계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4→41)하였고, 전기전자(12→35) 및 수송장비(14→30)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전기전자의 경우는 2005-2007년 중에, 수송장비는 2002-2004년 중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표 5-5〉 충남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산업	99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농림수산물	0	0	0	0	0	0	0	0	0	0
광산품	0	0	0	0	0	0	0	0	0	0
음식료품	4	0	1	0	0	0	0	2	0	7
섬유 및 가죽제품	1	0	0	0	0	0	0	1	0	2
목재 및 종이제품	2	0	0	0	0	0	0	0	0	2
인쇄, 출판 및 복제	0	0	0	0	0	0	0	0	0	0
석유, 석탄제품	1	0	0	0	0	0	0	0	0	1
화학제품	19	2	1	1	4	1	2	2	4	36
비금속광물제품	4	1	0	0	0	1	1	1	0	8
제1차금속	2	0	0	0	2	0	0	0	1	5
금속제품	2	0	1	1	0	0	0	0	0	4
일반기계	14	2	0	0	1	4	1	1	1	24
전기전자기기	12	3	2	1	2	2	5	3	5	35
정밀기기	2	0	1	0	0	0	0	0	0	3
수송장비	14	1	1	3	4	3	1	2	1	3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	0	1	2	0	0	1	1	1	7
전력, 가스 및 수도	1	0	0	0	0	1	0	0	0	2
건설	0	0	0	1	0	0	0	0	0	1
도소매	4	2	3	2	6	14	5	2	3	41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1	1	1	0	0	3
운수 및 보관	0	0	0	0	0	0	0	0	0	0
통신 및 방송	1	0	0	0	0	0	0	0	0	1
금융 및 보험	2	0	0	0	0	0	1	0	0	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0	0	0	0	0	0	0	0	0
교육 및 보건	0	0	0	0	0	0	2	0	0	2
기타	1	1	1	1	0	0	1	1	1	7
합계	87	12	12	12	20	27	21	16	17	224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852→5091)하였고, 전기전자(108→296) 및 섬유·가죽(50→115)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표 5-6〉 서울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산업	99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농림수산물	4	0	1	0	0	0	0	1	0	6
광산물	1	1	0	0	0	1	1	1	1	6
음식료품	30	7	3	3	2	4	5	2	1	57
섬유 및 가죽제품	50	12	12	6	6	5	12	7	5	115
목재 및 종이제품	9	1	1	0	1	0	1	2	0	15
인쇄, 출판 및 복제	12	8	4	1	4	7	2	2	4	44
석유, 석탄제품	8	1	0	0	1	1	0	0	0	11
화학제품	105	21	10	13	7	10	10	10	3	189
비금속광물제품	12	4	1	2	0	2	1	2	0	24
제1차금속	9	0	0	0	0	1	1	0	2	13
금속제품	23	1	2	0	1	4	0	2	1	34
일반기계	81	13	5	10	7	8	11	8	3	146
전기전자기기	108	35	27	17	17	29	21	29	13	296
정밀기기	33	3	3	6	5	4	7	5	2	68
수송장비	18	2	1	1	3	3	5	3	5	4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6	7	5	3	1	0	3	4	2	51
전력, 가스 및 수도	1	1	1	0	1	1	0	1	1	7
건설	19	5	3	4	9	7	7	10	9	73
도소매	852	674	475	320	434	581	817	435	503	5,091
음식점 및 숙박	63	22	27	25	33	41	32	34	38	315
운수 및 보관	99	21	12	19	20	21	23	27	18	260
통신 및 방송	14	9	6	4	5	4	6	2	4	54
금융 및 보험	69	35	51	62	34	46	44	42	33	4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	13	14	10	12	14	27	21	22	148
교육 및 보건	13	3	10	6	3	5	10	8	8	66
기타	337	171	136	94	88	133	156	172	125	1412
합계	2,011	1,070	810	606	694	932	1,202	830	803	8,958

자료: 산업자원부

경기도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103→1116)하였고, 전기전자(93→296) 및 수송장비(31→70)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표 5-7〉 경기도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산업	99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농림수산물	0	0	1	0	3	0	0	2	2	8
광산물	1	0	0	0	0	0	0	0	0	1
음식료품	18	4	1	1	3	4	3	2	1	37
섬유 및 가죽제품	17	1	2	0	1	4	1	1	0	27
목재 및 종이제품	6	1	0	0	2	1	4	1	1	16
인쇄, 출판 및 복제	3	1	1	0	0	2	0	1	0	8
석유, 석탄제품	0	0	0	0	1	0	0	0	0	1
화학제품	65	5	3	7	6	5	13	14	7	125
비금속광물제품	13	0	2	4	0	2	3	3	3	30
제1차금속	12	2	1	0	2	4	4	1	1	27
금속제품	17	3	3	1	0	1	5	1	3	34
일반기계	88	19	13	4	13	11	18	16	9	191
전기전자기기	93	34	17	15	21	34	34	20	28	296
정밀기기	34	7	3	5	4	2	4	7	3	69
수송장비	31	7	5	5	5	5	4	5	3	7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0	3	3	2	0	2	3	1	4	28
전력, 가스 및 수도	0	0	0	1	0	0	0	1	0	2
건설	5	2	1	1	0	3	3	2	1	18
도소매	103	106	114	66	98	138	206	153	132	1,116
음식점 및 숙박	5	6	10	8	8	10	15	11	15	88
운수 및 보관	1	2	1	0	2	3	4	8	5	26
통신 및 방송	1	0	0	0	0	0	0	0	1	2
금융 및 보험	2	0	2	0	4	0	1	1	2	1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	2	2	2	4	3	2	5	2	25
교육 및 보건	4	1	0	0	2	1	4	2	1	15
기타	27	23	13	10	12	25	23	18	18	169
합계	559	229	198	132	191	260	354	276	242	2,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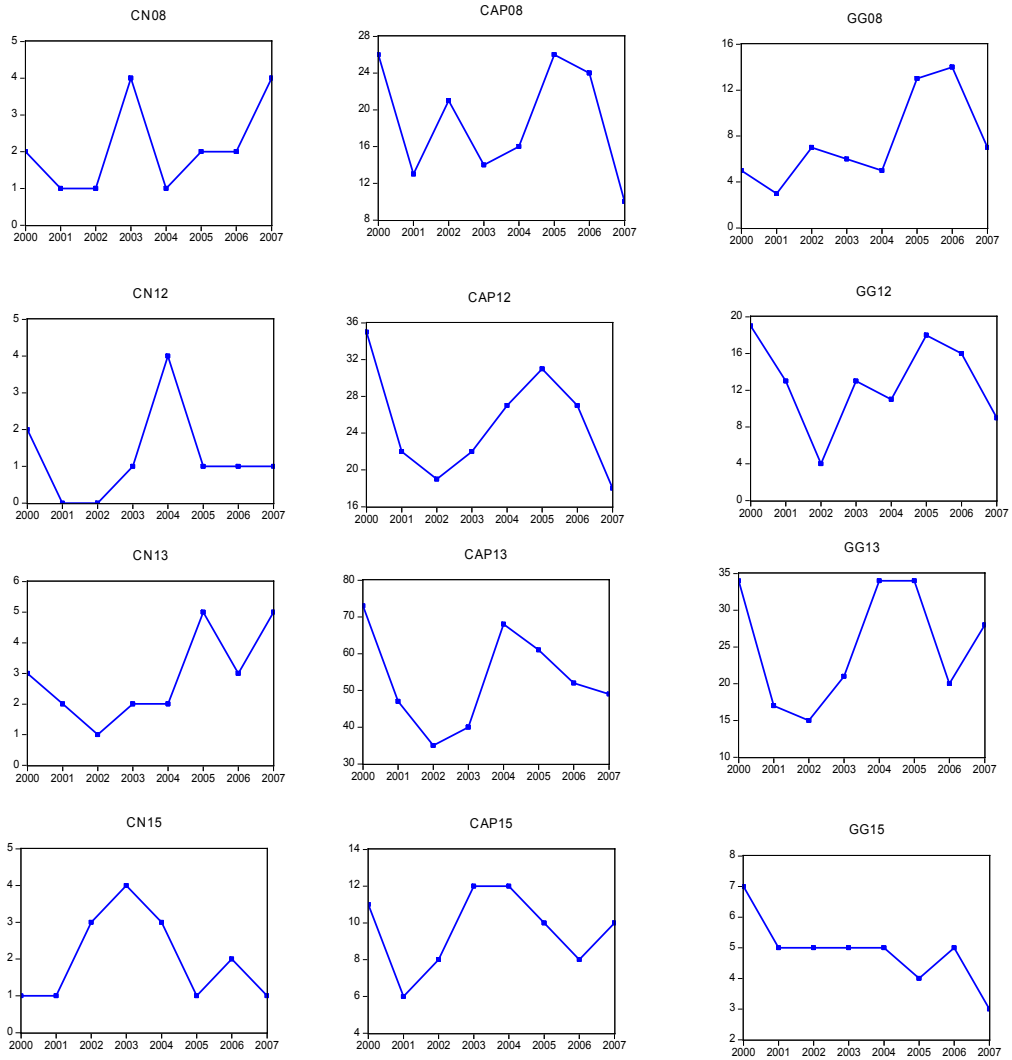
〈표 5-8〉 수도권 외국인 투자업체의 산업별 등록 연도 추이

산업	99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농림수산물	4	0	2	0	3	0	0	3	2	14
광산물	2	1	0	0	0	1	1	1	1	7
음식료품	51	11	4	4	6	8	8	4	2	98
섬유 및 가죽제품	72	13	14	6	7	9	13	8	5	147
목재 및 종이제품	17	3	1	0	3	1	5	4	1	35
인쇄, 출판 및 복제	15	9	5	1	4	9	2	3	4	52
석유, 석탄제품	9	2	0	0	2	1	0	0	0	14
화학제품	185	26	13	21	14	16	26	24	10	335
비금속광물제품	28	4	3	6	0	4	4	5	4	58
제1차금속	23	2	1	0	2	9	5	2	3	47
금속제품	50	5	7	1	2	5	6	5	6	87
일반기계	204	35	22	19	22	27	31	27	18	405
전기전자기기	229	73	47	35	40	68	61	52	49	654
정밀기기	71	10	7	11	9	6	12	12	5	143
수송장비	55	11	6	8	12	12	10	8	10	132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43	10	9	5	2	3	6	5	6	89
전력, 가스 및 수도	1	1	1	1	1	1	0	2	1	9
건설	24	7	4	6	9	10	10	12	10	92
도소매	976	829	626	416	578	784	1143	708	718	6778
음식점 및 숙박	70	31	37	33	41	52	48	49	55	416
운수 및 보관	103	23	16	20	22	27	29	36	24	300
통신 및 방송	15	9	6	4	5	4	6	2	6	57
금융 및 보험	72	35	53	62	38	46	45	44	35	43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	15	16	13	16	19	30	29	27	184
교육 및 보건	17	4	11	6	5	6	14	11	9	83
기타	365	195	150	106	102	158	180	194	146	1596
합계	2,720	1,364	1,061	784	945	1,286	1,695	1,250	1,157	12,262

넷째,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서울 등 수도권이 외투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충청도가 외투기업유치에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투기업의 등록 자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5-2>에서 충청도,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 외투기업의 등록추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의 그림이고, 행별로 위에서 차례로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및 수송장비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충청도와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간에 뚜렷한 부(-)의 상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¹²⁾

12) 충청도와 수도권 외투기업의 등록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화학제품만 -0.37이고 일반기계는 0.46, 전기전자는 0.35 및 수송장비는 0.39의 양의 값을 보였다.

〈그림 5-2〉 충남,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등록 추이



패널회귀식을 이용해서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하는 가의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충남도의 제조업 14개 업종의 외투기업 등록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도권의 14개 업종의 외투기업 등록수와 충남의 GRDP를 설명변수로하는 다음의 패널회귀식을 고려한다.

$$NF_{it}^{CN} = \beta_0 + \beta_{1i} NF_{it}^{CAP} + \beta_2 \Delta \log (GRDP_t^{CN}) + \epsilon_{it}$$

여기서 NF_{it}^{CN} 은 t 년도에 i 업종에 대한 충남도의 외투기업 등록수이고, NF_{it}^{CAP} 은 t 년도에 i 업종에 대한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이며, $GRDP_t^{CN}$ 은 t 년도의 충남도의 실질 GRDP이다. 추정기간은 2000-2006년이고 업종은 14개의 제조업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β_1 의 추정치가 유의적으로 음수이면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추정법으로 위의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첫째는 β_1 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같다는 제약하에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표 5-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β_1 의 추정치가 0.0442이고 p -값이 0.000이어서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

〈표 5-9〉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p-값
수도권 외투기업 등록수	0.0442	0.000
충남의 GRDP 증가율	2.1528	0.588
음식료품	-0.0218	
섬유 및 가죽제품	-0.3939	
목재 및 종이제품	-0.2546	
인쇄, 출판 및 복제	-0.3279	
석유, 석탄제품	-0.1996	
화학제품	0.5282	
비금속광물제품	0.1182	
제1차금속	-0.0658	
금속제품	-0.1116	
일반기계	-0.0832	
전기전자기기	-0.0355	
정밀기기	-0.3802	
수송장비	1.0699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1578	
상수	0.0829	0.809
R^2	0.3672	

둘째는 β_1 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상이하다는 제약하에 패널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표 5-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β_1 의 추정치가 유의적인 업종은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및 수송장비업인데 모두 추정치의 부호가 모두 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없었다.

<표 5-10> 패널회귀식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p-값
충남의 GRDP 증가율	3.5935	0.084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음식료품	-0.0242	0.675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섬유 및 가죽제품	-0.0130	0.672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목재 및 종이제품	-0.0788	0.465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인쇄, 출판 및 복제	-0.0402	0.479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석유, 석탄제품	-0.1540	0.568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화학제품	0.0732	0.000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비금속광물제품	0.0821	0.298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제1차금속	-0.0181	0.811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금속제품	0.0006	0.992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일반기계	0.0418	0.001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전기전자기기	0.0430	0.000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정밀기기	-0.0170	0.609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수송장비	0.1967	0.000
수도권의 외투기업 등록수: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712	0.157
R^2	0.600	

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전국

KOTRA는 2006년도 외투기업의 경영애로 조사를 2006년 4월 26일- 6월 22일간 전국의 280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중 13개의 기업이 대전과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본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정확도가 높아서 본 연구에는 충남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충남지역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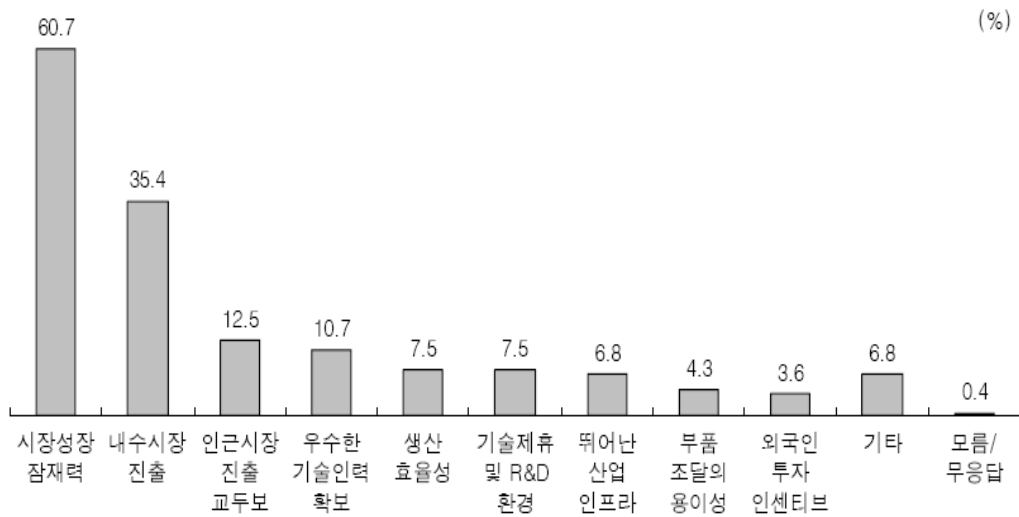
〈표 5-11〉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비중(%)
공장위치	서울	118	43.1
	대전 / 충청	13	4.7
	경기 / 인천	91	33.2
	부산 / 경남	14	5.1
	대구/울산/경북	25	9.1
	광주/전라/제주	13	4.7
업종	제조업	151	54.5
	비제조업	126	45.5
모회사 국적	미국	58	20.7
	일본	74	26.4
	유럽	103	36.8
	기타	45	16.1
투자 시점	1989년 이전	51	21.2
	1990-1999년	77	32.0
	2000-2002년	52	21.6
	2003년 이후	61	25.3

자료: KOTRA(2006)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동기는 ‘시장 성장 잠재력’(60.7%)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35.4%)이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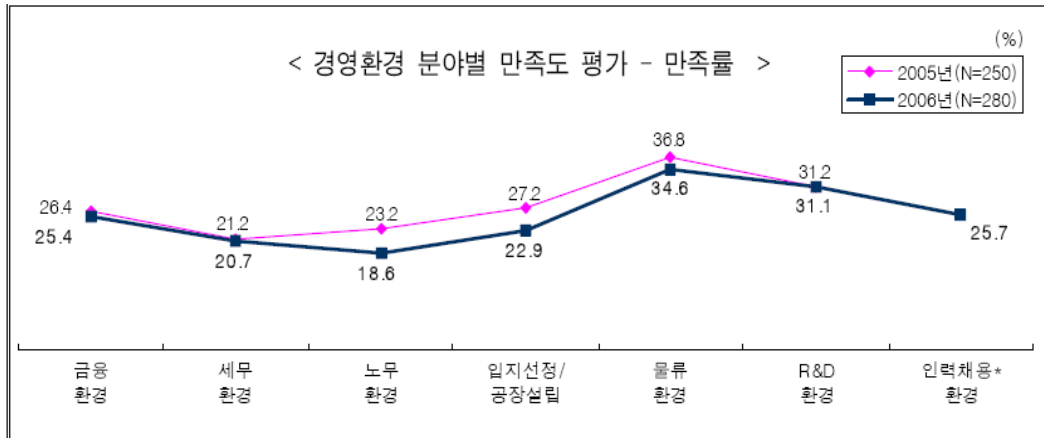
〈그림 5-4〉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



자료: KOTRA(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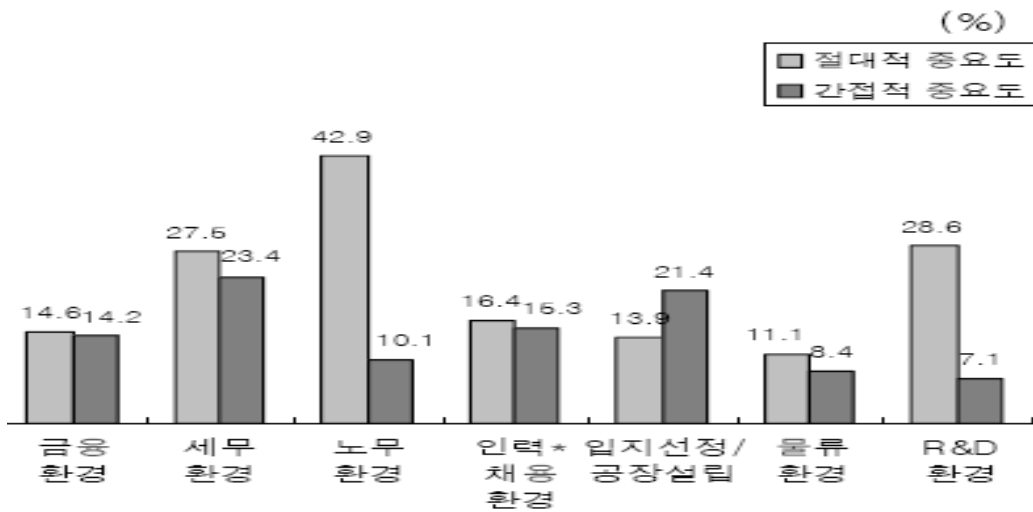
둘째, 7개의 경영환경 평가 분야에서 “물류환경”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R&D 환경’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노무환경”과 “세무환경”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외투기업은 경영환경 중 중요도의 순서를 노무 > R&D > 세무 > 인력채용 > 금융 > 입지선정/공장설립 > 물류 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경영환경 만족도 평가



자료: KOTRA(2006)

〈그림 5-6〉 분야별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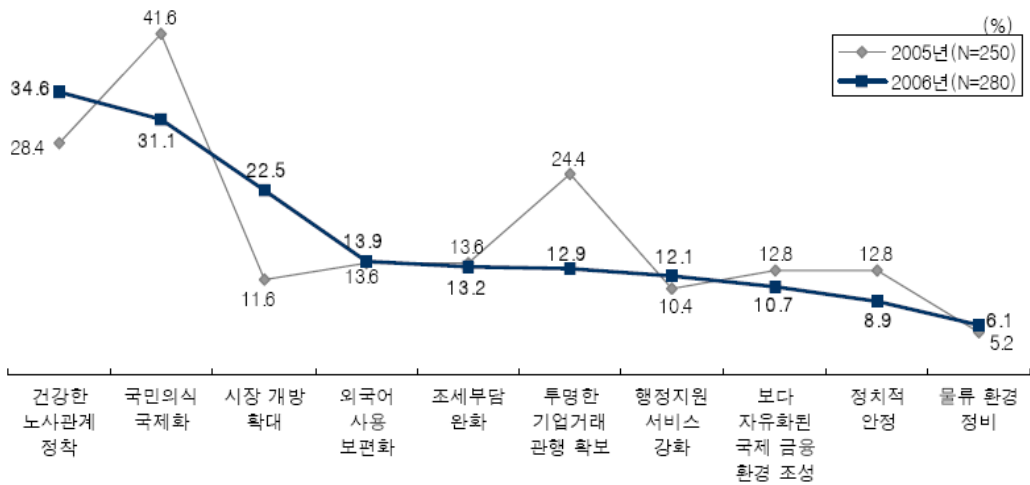


자료: KOTRA(2006)

셋째, 외투기업은 최초의 투자시점에 비해 개선된 항목으로는 ‘언어소통의 편의성’,

‘행정기관의 서비스’, ‘자금조달의 편의성’등을 지적하였고, 악화된 항목으로는 ‘인건비’, ‘간접비용’ ‘물류비용’ 등을 지적하였다. 넷째, 향후 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 ‘국민의식 국제화’ ‘시장개방 확대’ 등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림 5-7〉 향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자료: KOTRA(2006)

넷째, 분야별 세부개선사항은 금융환경 분야는 ‘본사와의 채권 채무상계 절차 복잡’, 세무환경 분야는 ‘불필요한 행정 중복’, 노동환경 분야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 인력채용환경 분야는 ‘지원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지선정/공장설립환경 분야는 ‘각종 인프라 부족’, 물류환경 분야는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그리고 R&D 환경 분야는 ‘지적 소유권제도 미비’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표 5-12〉 분야별 개선 요구 사항

분야	순위	개선 항목	응답률 (%)	05년 대비 증감률(%)
금융 환경	1위	본사와의 채권 채무 상계 절차 복잡	34.3	-5.3
	2위	외환거래 주거래 은행 지정 제도	28.9	+6.5
	3위	담보 위주 대출 관행	21.1	+1.5
세무 환경	1위	불필요한 행정 중복	37.1	+10.7
	2위	조세당국의 고압적 태도	25.7	+1.3
	3위	세법개정 정보 습득을 위한 영문자료 부족	22.9	-15.9
노무 환경	1위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	41.8	-
	2위	복잡한 임금체계	27.1	-
	3위	퇴직금 제도	23.9	-
인력채용 환경	1위	지원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51.1	-
	2위	높은 임금 수준 요구	43.2	-
	3위	지원자의 전문성 부족	36.8	-
입지선정/공장설립 환경	1위	각종 인프라 부족	28.2	-1.4
	2위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25.0	+7.8
	2위	담당관청 행정처리 지연	25.0	+3.0
물류 환경	1위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31.8	-11.0
	2위	노동시장 경직	28.2	+5.0
	3위	해운, 항공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19.6	-0.8
R&D 환경	1위	지적 소유권 제도 미비	35.0	-6.6
	2위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	31.4	+0.6
	3위	정부지원 및 동기부여 제도 미비	23.9	+1.9

자료: KOTRA(2006)

4.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지역별

1) 인력 채용

인력채용에 대한 외투기업의 응답은 만족률이 25.7%이고 불만족률이 33.9%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대전지역은 만족도가 3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대구/울산/경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기업이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인력채용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전 체		280	25.7	40.4	33.9	2.88
서 울		118	25.4	41.5	33.1	2.86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30.8	46.2	23.1	3.00
	경 기 / 인 천	91	24.2	33.0	42.9	2.78
	부 산 / 경 남	14	50.0	28.6	21.4	3.36
	대구/울산/경북	25	16.0	60.0	24.0	2.92
	광주/전라/제주	13	23.1	46.2	23.1	3.00
노조 설립 여부	설 립	89	20.2	39.3	40.4	2.74
	미 설 립	188	27.7	41.0	31.4	2.94

자료: KOTRA(2006)

인력채용시 요구되는 개선사항으로는 대전/충청지역에서는 ‘높은 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고 ‘영어의사소통 능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유사한 비율로 지적되었다.

〈표 5-14〉 인력채용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사례수	지원자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부족	높은 임금수준 요구	지원자의 전문성 부족	헤드헌팅 서비스의 낮은 질
전 체		280	51.1	43.2	36.8	10.4
서 울		118	56.8	44.9	35.6	11.9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38.5	46.2	38.5	-
	경 기 / 인 천	91	42.9	48.4	38.5	9.9
	부 산 / 경 남	14	57.1	21.4	42.9	14.3
	대구/울산/경북	25	60.0	40.0	32.0	8.0
	광주/전라/제주	13	38.5	30.8	23.1	7.7
노조 설립 여부	제 조 업	151	44.4	45.0	42.4	7.9
	비 제 조 업	126	59.6	40.5	30.2	13.5

자료: KOTRA(2006)

2)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분야

대전/충청지역의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족이 30.8%와 보통이 61.5%로 조사되었다.

〈표 5-15〉 공장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전 체		280	22.9	56.8	20.0	3.00
서 울		118	16.1	67.8	16.1	2.96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30.8	61.5	7.7	3.23
	경 기 / 인 천	91	26.4	46.2	27.5	2.98
	부 산 / 경 남	14	42.9	50.0	7.1	3.36
	대구/울산/경북	25	32.0	52.0	16.0	3.04
	광주/전라/제주	13	15.4	53.8	30.8	2.77
업 종 별	제조업	151	27.2	50.3	22.5	3.03
	비제조업	126	18.3	63.5	17.5	2.96

자료: KOTRA(2006)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사항으로 대전/충청지역의 외투기업은 ‘각종인허가 취득의 어려움’과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요건 완화’를 지적하였다.

〈표 5-16〉 공장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관련 개선 사항

구 분		사례수	각종 인프라 부족	각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담당관청 행정처리 지연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	수도권 신규 공장증축/신축 제한 등	외국인 투자지역 요건 완화	입지비용 보조금 지원 요건의 완화
전 체		280	28.2	25.0	25.0	16.8	15.0	11.8	11.1
서 울		118	26.3	16.1	30.5	16.1	18.6	12.1	13.2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23.1	30.8	15.4	23.1	-	30.8	7.7
	경 기 / 인 천	91	35.2	39.6	22.0	16.5	15.4	12.1	13.2
	부 산 / 경 남	14	-	14.3	14.3	21.4	7.1	28.6	21.4
	대구/울산/경북	25	28.0	16.0	16.0	12.0	16.0	16.0	12.0
	광주/전라/제주	13	38.5	15.4	30.8	30.8	7.7	-	7.7
업 종 별	제조업	151	32.5	33.8	26.5	17.9	14.6	15.2	9.3
	비제조업	126	23.8	14.3	23.8	15.9	15.9	7.9	13.5

자료: KOTRA(2006)

공장설립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전/충청지역의 외투기업은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에 따른 임대료감면 인센티브’와 ‘관련 국내기업 소재지와의 근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시 중요 고려사항

구 분		사 례 수	필요인력 조달 및 유자에 적합한 주변 생활환경	물류비 용 절감 효과	관련 국내기업 소재지와 의 근접성	항만과 의 인접성, 도로의 편리성	외국인 전문단지 정에 따른 임대료감면 인센티브	소관자 체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홍보	협조적 이고 신속한 해당 부지 관련 기관의 지원	해당지 역의 시골개 발 및 기술이 전 측면	부지매매 에 따른 자본이익
전 체		280	32.9	26.8	22.9	20.0	15.0	12.9	12.5	10.0	4.3
서 울		118	28.0	22.0	22.9	18.6	11.0	12.7	15.3	11.9	5.9
공 장 위 치 별	대전 / 충청	13	30.8	23.1	38.5	7.7	46.2	7.7	15.4	-	-
	경 기 / 인 천	91	40.7	34.1	27.5	19.8	15.4	9.9	11.0	12.1	1.1
	부 산 / 경 남	14	35.7	14.3	14.3	7.1	7.1	28.6	-	7.1	7.1
	대구/울산/경북	25	36.0	28.0	8.0	36.0	12.0	20.0	12.0	4	8.0
	광주/전라/제주	13	23.1	38.5	15.4	30.8	15.4	7.7	7.7	7.7	7.7
업 종 별	제조업	151	41.1	31.8	29.1	19.2	16.6	9.3	11.3	9.3	1.3
	비제조업	126	22.2	20.6	15.9	20.6	13.5	17.5	14.3	11.1	7.9

자료: KOTRA(2006)

공장입주 방식으로 대전/충남의 외투기업은 ‘기존일반공단 입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공장 입주 방식

구 분		사례수	기존일반 공단입주	산업단지 공단 입주	기존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자체 공장부지 신규 개발	공단지역 외, 기존 공장 임대
전 체		280	27.9	13.2	10.7	9.6	9.3
서 울		118	22.9	6.8	3.4	3.4	9.3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46.2	15.4	23.1	7.7	7.7
	경 기 / 인 천	91	30.8	13.2	14.3	18.7	13.2
	부 산 / 경 남	14	28.6	14.3	28.6	14.3	-
	대구/울산/경북	25	32.0	32.0	8.0	4.0	4.0
	광주/전라/제주	13	15.4	38.5	23.1	15.4	7.7
업 종 별	제조업	151	31.8	18.5	15.9	13.9	7.9
	비제조업	126	23.8	6.3	4.8	4.0	11.1

자료: KOTRA(2006)

3) 물류환경 분야

대전/충남 외투기업의 물류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만족과 보통의 비중이 각각 30.8%와 53.8%를 기록하였다.

〈표 5-19〉 물류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전 체		280	34.6	39.6	25.7	3.08
서 울		118	37.3	38.1	24.6	3.09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30.8	53.8	15.4	3.15
	경 기 / 인 천	91	29.7	39.6	30.8	2.99
	부 산 / 경 남	14	57.1	21.4	21.4	3.36
	대구/울산/경북	25	28.0	52.0	20.0	3.08
	광주/전라/제주	13	30.8	46.2	23.1	3.15
업 종 별	제조업	151	31.8	41.7	26.5	3.04
	비제조업	126	38.1	36.5	25.4	3.12

자료: KOTRA(2006)

대전/충남 외투기업은 물류 환경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으로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30.8%)와 ‘물류산업전문 인력부족’(23.1%)을 지적하였다.

〈표 5-20〉 물류관련 개선요구 사항

구 분		사례수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노동시장 경직	해운, 항공 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높은 물류부 지 확보 비용	물류산업전 문 인력부족
전 체		280	31.8	28.2	19.6	18.6	16.1
서 울		118	29.7	32.2	14.4	21.2	21.2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30.8	7.7	-	7.7	23.1
	경 기 / 인 천	91	36.3	27.5	29.7	18.7	14.3
	부 산 / 경 남	14	50.0	7.1	7.1	21.4	7.1
	대구/울산/경북	25	24.0	44.0	12.0	16.0	4.0
	광주/전라/제주	13	15.4	15.4	46.2	-	7.7
업 종 별	제조업	151	31.1	25.2	19.2	19.9	18.5
	비제조업	126	32.5	31.0	20.6	17.5	13.5

자료: KOTRA(2006)

2.4 R&D 환경

대전/충남 외투기업의 R&D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만족과 보통의 비중이 각각 23.1%와 61.5%를 기록하였다.

〈표 5-21〉 R&D 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전 체		280	31.1	53.9	14.6	3.17
서 울		118	29.7	53.4	16.9	3.11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23.1	61.5	15.4	3.08
	경 기 / 인 천	91	30.8	52.7	15.4	3.13
	부 산 / 경 남	14	50.0	50.0	-	3.57
	대구/울산/경북	25	32.0	56.0	12.0	3.24
	광주/전라/제주	13	23.1	61.5	15.4	3.23
업 종 별	제조업	151	33.1	51.0	15.2	3.18
	비제조업	126	27.8	57.9	14.3	3.14

자료: KOTRA(2006)

대전/충남 외투기업의 R&D 환경 중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항목으로 ‘지적소유권제도 미비’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을 지적하였다.

〈표 5-22〉 R&D 환경 개선요구 사항

구 분		사례수	지적소유권 제도 미비	우수 연구인력 확보 곤란	정부지원 및 동기부여 제도 미비	R&D 지원산업 미발달	관련정보, 자료 및 기자재 부족
전 체		280	35.0	31.4	23.9	17.5	14.6
서 울		118	39.8	23.7	21.2	14.4	15.3
공 장 위 치 별	대 전 / 충 청	13	53.8	30.8	23.1	7.7	23.1
	경 기 / 인 천	91	35.2	37.4	30.8	22.0	13.2
	부 산 / 경 남	14	7.1	50.0	21.4	14.3	14.3
	대구/울산/경북	25	20.0	44.0	12.0	20.0	12.0
	광주/전라/제주	13	38.5	15.4	15.4	15.4	15.4
업 종 별	제조업	151	37.7	35.1	26.5	20.5	13.2
	비제조업	126	31.7	27.0	21.4	14.3	15.9

자료: KOTRA(2006)

제6장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충남의 정책과제

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졌고, 90년대 초반의 외국인투자 제한완화단계를 거쳐 98년 9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2002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시행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였고, 토지취득 절차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인수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를 허용하였으며, 외국자본이 국내기업 주식을 33.3%이상 취득할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이사회에 동의 없이도 주식 등을 전량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주된 내용은 첫째, 외국인투자의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그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등이다.

<표 6-1>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구 분	주 요 내 용
기반조성단계 (1984-1989)	- 외국인 투자가능업종을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에서 금지·제한으로 전환 - 제한업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투자비율 설정
제한완화단계 (1990-1997)	- 외국인투자신고제 도입(1991), 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1992) - 외국인투자개발 5개년 계획수립(1993) - 외국인 기업 복합민원 일괄합동심의제 및 민원자동승인제 도입(1995) - 외자도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1997)
활성화단계 (1998-현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1998.9),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 발표(1998.6) - 외국인토지취득 전면 자유화(1998.7),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허용(1998.5) -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의 추가 개방(1998.4), 주식,채권시장 개방 확대(1998.5) - 외국인 투자유치종합대책(2003.9), Invest KOREA 출범(2003.12)

자료: 이석희(2004)

2)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표 6-2>에 제시된 업종은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므로 외국인 투자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 6-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 연금,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기타 금융시장관리, 여음교환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단체 등
--

자료: Invest Korea, 2004.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되는 업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도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제한되고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표 6-3〉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제한 업종	외국인투자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벼, 보리 재배를 제외
육우사육	외투비율 50% 미만
연·근해어업	외투비율 50% 미만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신문은 외투비율 30%미만, 그 외는 50% 미만
핵연료가공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	원자력발전 제외하고는 허용됨, 단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며, 외투비율 50% 미만
육류도매	외투비율 50% 미만
내항여객, 내항화물운송	남·북한간 운송, 국내회사와 합작필수, 외투비율 50%미만
정지, 부정기 항공운송	외투비율 50% 미만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유선전화사업, 무선전화사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외투비율 49%이하(다만 KT는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및 1인 투자 비율 15% 이하)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허용 (특수은행과 농수축협 미개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미개방
방송채널사용	외투비율 33%이하,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단 중계유선방송은 미개방
위성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뉴스제공	외투비율 25% 미만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하고 허용

자료 : Invest Korea, 2004.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도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이하인 기업에 대해 투자 할 수 있지만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6월

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이다.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¹³⁾.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기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일정 조건 충족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표 6-4>에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13)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임이다. 특히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 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 6-4〉 조세감면대상기업

구분		조세감면요건
산업지원서비스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 개발 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으로서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		- 제조업은 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국제회의시설 등은 투자금액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유통)산업, SOC는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 고도기술 등의 연구시설은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상에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 달러 이상 - 이상의 조건은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관광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은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 달러 이상
제주진흥기구 개발사업 시행자		-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이상으로 총 개발 사업비 1억 달러 이상
제주 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생명공학, 정보통신, 문화, 첨단기술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업, 문화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시설업, 대체에너지사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제조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상시 고용원 100명 이상 - 물류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자료 : Invest Korea, 2004.

조세감면 대상은 신규로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양·수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폭이 3년 50%, 2년 30%로 축소된다. 구체적인 조세감면 내용은 <표 6-5>에 요약되어 있다.

〈표 6-5〉 조세감면 내용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건
법인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2.31까지 총 10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005.1.1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 지역입주기업
	<p>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2.31까지 총 8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005.1.1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p>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인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주: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 제고 가능

자료 : Invest Korea, 2004.

②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6-6>에 정리되어 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는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자본재이다.

<표 6-6>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현황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 요건
관세	3년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 자유무역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자료 : Invest Korea, 2004.

나) 현금지원제도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후부터 대규모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기위해, 투자자와 정부간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현금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6-7>에 정리되어 있다. 2004년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금지원규모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에 한정하고 있다.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총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과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와 현금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지원의 한도는 정부의 현금지원, 임대 토지를 제공한 경우 정부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산정된다. 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고도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이다. 평가를 마친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지원을 받는 투자가는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사업을 영위할 의무를 갖게 된다.

현금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된다. 분할지급의 경우 투자계획 변경이나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한다. 토지 매입비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임대료는 신청인과 임대 토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5년간 비용이 지출된 해의 다음 연도 초에 일시 지급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100만 원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고용보조금은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학사급 이상의 이공계 인력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된다.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표 6-7〉 현금지원 내역

고려요소	조건	현금지원 내용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 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 가능성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 영위를 위한 공장 시설·사업장의 신설·증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최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핵심 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단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석사학위 이상 또는 3년이상 연구 경력의 학사 학위 이상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공장 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자료 : Invest Korea, 2004.

다) 입지지원

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입지지원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 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는 당해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의 가액에 1% 이상의 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안에 있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 등의 임대료율은 산업자원부장관,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그리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해지는 요율을 적용한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매입할 때, 국·공유재산일 경우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는 연 4% 이내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 시설이나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표 6-8〉 입지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으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 국가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설 시설 운영자	100% 이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	75% 이내	
	-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50% 이내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 개발형 외국인 투자지역	100% 감면	
	- 1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외국인 투자지역	100%
		일반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 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4, 2005.

② 산업입지 지원

우리나라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시대별·지역별·성장 주력산업을 수용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¹⁴⁾.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산업입지는 지정의 목적, 지정 위치, 입주자격, 지원의 범위 등에 따라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불렸던 외국인투자지역(Type B)은 원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2004년 12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를 이관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형태(Type B)로 규정되었다.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Type A)과 같은 조세감면의 혜택 부여하고 있다. 현재 충남 천안, 충북 오창, 광주 평동, 전남 대불, 경남 진사, 경북 구미가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개별형과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및 연구개발업 등 업종별로 5~30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활동 공간을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지원을 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내의 일정구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임대전용으로 운영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선 부지매입비의 1% 범위의 저렴한 임대료와 업종별로 5~10백만달러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지원한다. 현재 경남, 사천, 충남 천안, 경기 평택, 경남 양산, 전북 전주, 전남 여천, 충남 연기, 충북 음성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 및 유통, 화물터미널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관세를 면제시킨 보세구역으로, 수출목적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4)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비해 단지 내의 제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비교적 손쉽게 제조업 등의 생산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표 6-9〉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주요 산업입지제도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TYPE A)	외국인투자지역 (TYPE B)*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위치	제한없음(외국인투 자기업이 선택하는 지역)	산업단지 내	항만, 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현황	8개 지역	6개단지	8개 지역	4개 지역	제주
입주 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 조업, 서비스업, 물류, SOC, R&D센터)	외국인투자기업(투 자지분 30%이상)	국내외 기업 (제조, 물류, 무역, 지원 서비스업, 외국인지분을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1 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과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항만·공항시설 운영업 등)	첨단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임대 료 지원	100%	· 백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100 % 감면 · 오백만 달러 이상, 일반제조업:75% 감면	최대 100% 감면	·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 조성, 토지 등에 임대료 감면 · 외국인 편의 시설설치 소요 자금지원	· 대체조립비, 대체 초지 조성비, 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50%감면 · 투자시설용 국·공 유지는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세제 법인	법인, 소득, 지방세 (5년간 100%, 이후 2년 5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Type A와 같은 지원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법인, 소득, 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법인, 소득, 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법인, 소득, 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특징	정부가 저렴한 가 격으로 공장 부지 를 제공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운영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중심으로 운영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한 도시 형태로 개발	제주도를 금융, 첨단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동북아중심 도시로 개발

주: 종전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불렸던 특구제도로써 원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2004년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됨.

자료 : Invest Korea, 2004.

물류관련사업, 수출입 거래 목적 도매업 영위자 등의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료 및 조세감면,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당 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 활동 이외에 생활 및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의료, 주거환경, 행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지원을 인정한 포괄적 개념의 행정 지원 구역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부산, 진해, 인천,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재정지원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 중 FDI가 25% 이상 차지해야 함) 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하고 있다. 재정지원내용이 <표 6-10>에 정리되어 있다.

<표 6-10> 재정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월10만원~50만원까지 지사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고용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10만원~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사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4, 2005.

마) 외국인투자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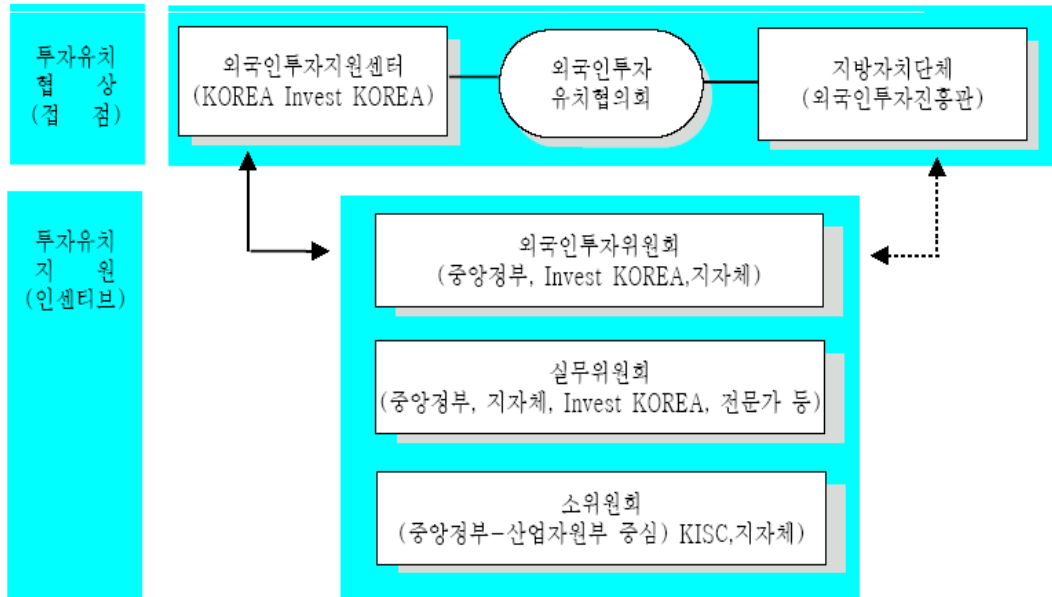
① Invest KOREA

투자유치기관의 투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nvest KOREA가 2003.12에 설치되었다. Invest KOREA는 KOTRA 내에 설립된 한국의 공식적인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이다. 구체적인 Invest Korea의 외국인투자 지원 서비스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부동산투자 등 투자상담 및 제도안내이다. 둘째, 투자신고 처리, 합작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 수행이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취득 등 각종 행정절차 직접처리 및 일괄 대행처리이다. 넷째, 주택, 학교 및 의료보험 등 외국투자자의 국내정착 지원 및 고충 처리이다. 다섯째, 신설법인의 설립대행 처리 등이다.

외국인투자유치의 접점창구는 Invest KOREA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Invest KOREA에서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전담기구로서 투자문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지원서비스를 담당한다. 하지만 관련 인·허가를 모두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접촉하는 기관을 단일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자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진흥관과 투자유치부서를 두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인·허가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KOTRA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조세감면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반 인센티브의 결정권 보유 등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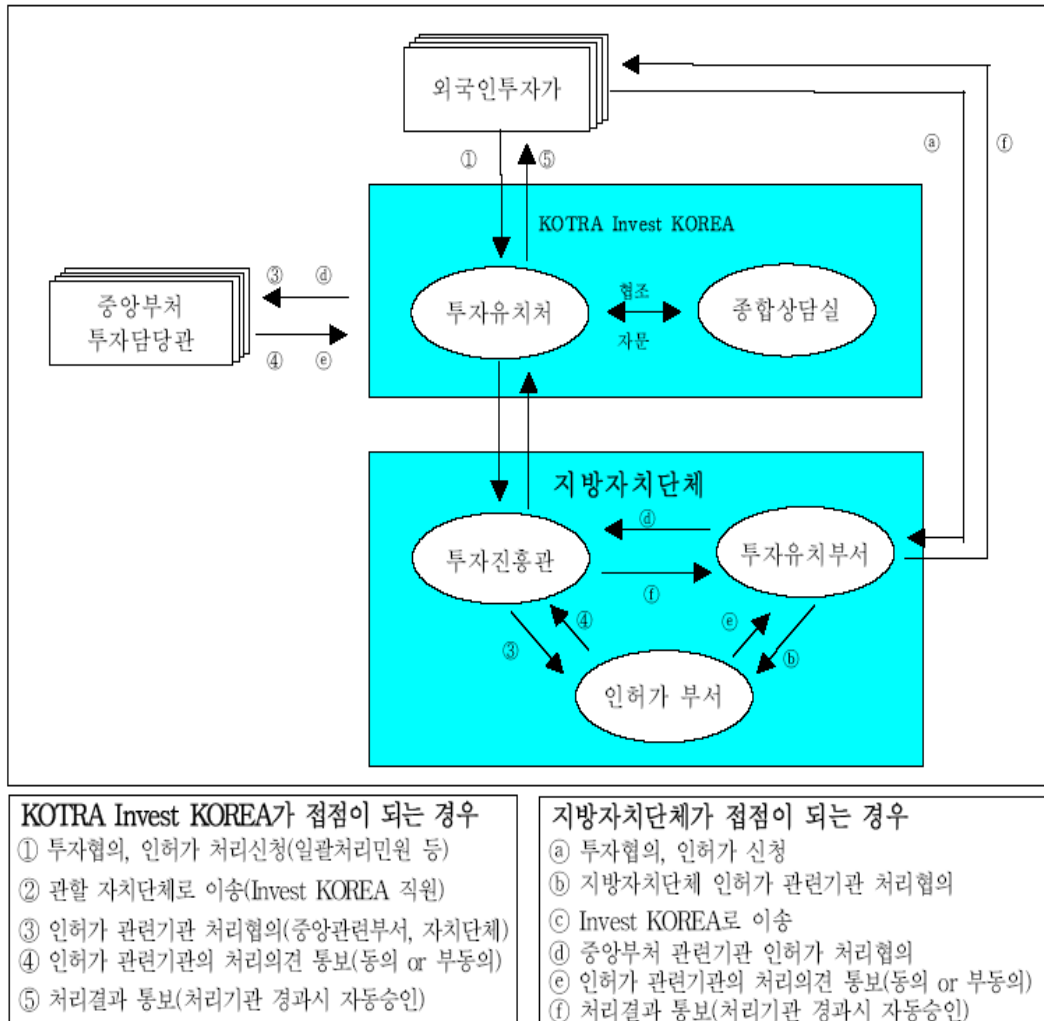
〈그림 6-1〉 외국인 투자 유치체계



자료: 이석희(2004)

외국인 투자의 유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유치절차의 시작점은 Invest KOREA와 지방자치단체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Invest KOREA의 투자유치처에 직접 접촉할 경우, 투자유치처가 투자정보, 합작투자 파트너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상담실이 투자상담, 행정지원 및 고충처리, 인·허가 사항의 직접 일괄대행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nvest KOREA의 투자유치처는 각국의 KOTRA 투자유치전담무역관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하고 있다. 민원대행창구인 Invest KOREA에 접수된 인·허가 사항을 관련 인·허가 부서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접점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유치 부서에서 직접 인·허가 등 민원을 접수하여 자치단체 내 관할 인·허가 부서로 이송하고 Invest KOREA를 통하여 중앙부처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림 6-2〉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



자료: 이석희(2004)

②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 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별로 PM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PM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한다. 둘째,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 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현금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외국

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차·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입된 PM 제도의 신속한 정착 및 효과성이 있는 PM의 역량 발휘를 위해 PM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③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사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Invest KOREA에서 투자유치관련 절차, 상감·컨설팅, 제도적 지원사항, 투자애로해소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행정처리, 사후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투자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환경, 인센티브, 투자절차, 경제정보, 입지지원 등의 각종 투자관련 정보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2004~2008)을 통해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2004년 3월 교육, 주거, 의료 등 6개 분야의 102개 과제를 정부와 공동 수립하여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충남의 직접투자 정책과 제도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6-11>에서 <표 6-18>에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지원정책이 수도권과 충북의 경우에 비교되어 정리되어 있다.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 입지지원(전용임대단지 임대료감면, 공유재산 임대), 입지보조금(분양가보조금, 용지매입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현금지원, 생활환경 개선지원, 유공자 포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원책은 수도권 및 충북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컨설팅 비용지원, 융자지원 및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의 지원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동남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도에 소재한 국내대기업과의 집적효과를 제고하고자 충남도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지원할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표 6-11> 지방세 감면

시 도	구 분	감면 내용
충 남	조건	고도기술수반산업 ¹⁵⁾ /산업서비스업 ¹⁶⁾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감면범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면제
서 울	조건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감면범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경 기	조건	고도기술수반산업
	감면범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면제
인 천	조건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감면범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0년간 100%, 3년간 50%
충 북	조건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감면범위	취득세, 등록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자료 : Invest Korea

15) 이하 고도기술수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제1항제1호에의한 조세감면대상을 의미함

16) 이하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제1항제1호에의한 조세감면대상을 의미함

〈표 6-12〉 입지지원(전용임대단지 임대료감면, 공유재산 임대)

시 도		지 원 내 용
충남	전용단지 ¹⁷⁾	조건: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이면서 첨단업종·고도기술 업종
		임대료: 121원/월/㎡
	기타	지원범위 : 산업단지개발시행자 소유 토지 임대 시 10년 이내 임대료 지원
서울		조건 : 시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 공시지가의 1~5%, 시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투자계획 검토 후 100%까지 감면 가능
		임대기간 : 50년이며 50년 연장 가능
경기		조건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 (단, 제조업 중 산집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이외의 경우 50%)이면서 - 첨단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첨단산업 ¹⁸⁾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단지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업종
		- 임대료 : 조성원가의 1%, - 임대료 감면 :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100%~50% 감면 - 임대평수는 200만불 당 1천평(30%내에서 증감)
충북	전용단지 ¹⁹⁾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기간 : 50년
		임대료 : 112원/월/㎡
		감면범위 -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서 1백만달러 이상 - 75% 감면 : 5백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 75% 감면 : 기타 외국인투자심의회를 거쳐 정한 사업
	기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하여 당해토지 가액의 1%가 임대료

17) 천안외국인전용단지

18) 이하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업을 의미함

19) 오창외국인전용단지

자료 : Invest Korea

〈표 6-13〉 입지보조금(분양가보조금, 용지매입비)

시 도	지 원 내 용
충남	지원범위 : 정상분양가의 50% 이내
서울	조건 : 사유지 매입시
	지원범위 - 매각대금의 연리 4% 수준으로 20년 분할 납부 가능 -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인천	조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충족
	지원범위 : 정상분양가와 계약상의 분양가의 차액. 정상분양가의 50% 초과불가
충북	공유재산 매각시
	지원범위 : 20년간 분할 상환

자료 : Invest Korea

〈표 6-14〉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지역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충남	조건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조건 :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지원범위 : 20인초과 고용 1인당 월 10만원 에서 100만원까지 지원. 단 기업 당 3억원 이내	지원범위 : 1인당 월 10만원에서10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 단, 기업당 3억원 이내
서울	조 건: 다음의 조건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당해 외국인투자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인을 초과할 것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조 건: 다음의 조건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당해 외국인투자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 가분이 20인을 초과할 것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지원 범위: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중 20인 초과 1인당 총 6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되 월 지급액은 100 만원 이하	지원 범위: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중 20인 초 과 1인당 총 6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100 만원 이하
인천	조건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시	조건: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 육훈련시
	지원범위 :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범위 : 1인당 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충북	조건: 5년이내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조건 : 내국인 20인 이상고용
	지원범위 : 초과 고용 1인당 월10만원~50만원 6개월내	지원범위 : 1인당 월 10만원~50만원, 6개월 간

자료 : Invest Korea

〈표 6-15〉 현금지원

시 도	지 원 내 용
충남	조건 : 법제14조의2의 제1항규정 충족
	용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건축비, 자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경기	조건 -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의한 조세감면대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시설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개발시설 - 기타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용도 : 임대료
	지원범위 : 투자금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통해 도의 임대료기준과의 차액지원
충북	조건 : 법제14조의2의 제1항규정 충족
	용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도입,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자료 : Invest Korea

〈표 6-16〉 시설보조금

시 도	지 원 내 용
충남	조건 :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인천	조건 :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내

자료 : Invest Korea

〈표 6-17〉 생활환경개선지원

지역	외국인학교(신설·확장) 사업비 및 운영비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외국인전용마을/서비스지원시설)
충남	총비용의 50%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토지매입비의 20%내에서 2억원까지, 기존시설 매입 시 20%내에서 1억원까지
인천	총비용의 50%이내	- 토지매입비의 20%이내 - 서비스지원시설 건립, 토지매입, 건축물 매입 시 20%이내

자료 : Invest Korea

〈표 6-18〉 유공자 포상제도

시도	포상내용		
충남	조건 : 도와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 기관 단체		
	유치금액	지급기준	지급액
	5백만불 ~1천만불	유치금액 × 0.0006	6천불미만
	1천만불 ~5천만불	6,000불 + [(유치금액-1천만불)× 0.0005]	25,500불미만
	5천만불 ~1억불	25,500불+[유치금액-5천만불)× 0.0004]	45,500불미만
	미화 1억불 이상	45,500불 + [(유치금액-1억불)×0.0003]	170,940불미만
서울	조건 :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 및 시·자치구의 공무원		
	지급규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당 1억원 이내		
	외국인투자금액	포상금 지급비율	
	1천만 달러 이하	외국인투자 금액의 0.1퍼센트	
	1천만 달러 초과 ~5천만 달러 이하	1만 달러+1천만 달러 초과분의 0.05퍼센트	
	5천만 달러 초과 ~1억 달러 이하	3만 달러+5천만 달러 초과분의 0.03퍼센트	
인천	조건: 민간인		
	외자 유치금액	지급율	지 급 산 식
	1천만불까지	5/10,000	
	1천만불초과 ~ 5천만불까지	4/10,000	5천불+(외자도입액-1천만불)×0.0004
	5천만불초과 ~ 1억불까지	3/10,000	2만1천불+(외자도입금액-5천만불)×0.0003
	1억불 초과	2/10,000	3만6천불+(외자도입금액 - 1억불)×0.0002
경기	조건 :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지급규모 : 개인, 기업, 단체의 경우 1억원 이내,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내, 자문료 프로젝트 당 500만원 이내		

자료 : Invest Korea

3. 지역경제와 연계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방안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은 현지국의 시장수요, 생산효율성, 기술력 등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고, 정치적 안정성, 사회정서 등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센티브와 같은 사업편의적인 요인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World Investment Report, 1998)하는 경향이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조사한 한국의 기업 환경은 최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는데(country forecast, 2002), 거시경제 환경은 1위로 부상, 외국인투자 정책도 4위를 기록했다.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는 노동시장(12위)과 조세부문(10위)이다.

〈표 6-19〉 한국의 기업 환경 조사

항 목	1997-2001	2002-2006
정치적 환경	8	8
정치적 안정성	10	10
거시경제 환경	12	1
시장기회	4	3
기업 및 경쟁정책	7	7
외국인투자 정책	9	4
무역 및 환율 규제	8	8
조세	8	10
금융	9	7
노동시장	12	12
사회인프라	7	7
전체 순위	8	6

주: 비교대상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16개국임.

자료: Economic Intelligence Unit(2002)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Investment Korea 가 조사한 바로는 노사관계정착과 투명한 기업거래관행 확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6-20〉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항 목	비 중(%)
노사관계 정착	54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26
국민의식의 국제화	17
시장개방 확대	16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5

자료: Investment Korea, 200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

다음으로 생산요소와 관련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노동관련 비용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자본시장과 관련된 기반여건인 불투명한 회계기준, 상호채무보증, 비효율적인 M&A 중개기능 등이 열악하고, 기업지배구조의 낙후 등의 문제가 외국인 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지대 등 토지이용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토지이용상의 규제 존재,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제한, 보증금 중심의 임대제도 등이 문제이다.

정부제도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과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 등으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법규가 완벽하지 못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기능 미비로 인하여 정책건의사항이나 실행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법률간의 상호 일관성 부족과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 위주의 정책, 관련 공무원의 지원태도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인·허가, 공장설립 및 환경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행정제도적 규제가 외국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세제도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도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세무감사 준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 세법이 추상적이어서 외국인에게 친숙하지 못한 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업비밀·실용신안권·상표권 보호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투자지원체제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조직과 관련 중앙부서와의 신뢰관계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관계구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에서는 투자자관계관리(Investor Relation Management)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ing in Korea Service Center)를 Invest Korea(2003.12.5)로 확대개편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부처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서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1998.9월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고하고 투자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주요 외국인 투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고도기술수반사업(495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으로 확대하였다. 10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하고,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8-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게 되었다. 단 감면기간 비용은 현행(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가 확대 개선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설립시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감면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임대료감면, 행정규제 적용을 완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인.허가처리 지원, 시·도 외국인 투자 진흥관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중앙정부는 지방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자금요청 시에 최대한 지원(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자금, 임대할 용지매입비 용자지원,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규모

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조례로 정함) 지원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핵심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인센티브 제공 권한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으므로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 됨으로써 보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기준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과의 협상과정에서 인센티브의 제공여부를 사전에 제시할 수 없고 보조금 지급결정 및 투자협상 절차상의 유기적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기업의 입지선정, 투자절차 등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재무개선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주요국과 비교한 투자유치 정책의 과제

첫째, 법·제도와 투자유치 행태간 모순이 존재한다. KOTRA의 Invest KOREA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투자유치체계를 천명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인센티브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부처에서 행사하고 있다. 법·제도상으로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인 Invest KOREA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단위의 개별 접점부서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영미법체계로서 투자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권한과 역할배분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투자유치의 속성 때문에 관련된 법·제도를 획일적이고 정형적으로 규정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내용, 협상 및 결정과정이 지극히 개별성을 띠고 있어 사안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속

성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도 및 관행으로 볼 때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은 관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유치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처리시간 지체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유치협상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접점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인·허가 규정, 처리절차, 책임소재, 감사제도 등의 법체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체계와 투자유치 행태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체계 및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명확하고,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의 외자유치체계를 견지하면서 단일화된 강력한 투자유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투자 유치와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여 점점 부서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개선만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하며 행·재정 전반의 분권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유치기능 분산 및 역할분담 미흡의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처의 외자유치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프로세스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투자유치계획의 총괄 및 소요예산 요구,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및 절차지정, 투자지역 지정계획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재정경제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은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⁰⁾. 실제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KOTRA의 Invest KOREA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에 중복 보고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치협상을 진행하는 KOTRA의 Invest KOREA와 자치단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정경제부에 다시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윈스톱 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법규 적용 또한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장관급 회의기구(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이므로 투자건

20)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영국이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유치업무를 산업자원부 산하에 두고 있다.

별로 신속히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역시 차관급 회의기구로서 투자협상 과정에서 신속한 대처가 힘든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외자유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부족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노력 및 정책결정에 좌우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통하여 투자유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실정이다.

셋째, 불완전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원스톱 서비스체계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의 원스톱은 규제완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투자촉진을 위한 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체계로서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필수적인 절차 이외에 입지탐색, 사업 타당성조사, 부품공급업체 알선, 마케팅활동 지원, 기술 및 연구인력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등 관련부대 서비스를 어떻게,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스톱 서비스인 민원처리의 간소화. 효율화도 미흡한 수준이다. 직접처리 민원사무의 경우 출자완료 확인, 서류자격 허가 및 변경, 사업자 등록 등 경미한 7개 민원 만 해당되어 실질적인 직접 처리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직접처리민원사무로 전환하여 Invest KOREA → 지방자치단체 → 관할중앙부처가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²¹⁾.

우리나라의 원스톱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패키지(Package)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실행을 위한 직접우편(DM) 및 텔레마킹, 목표기업 선정 및 방문 컨설팅, 시장조사 및 입지탐색 서비스를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의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그램, 원료공급 및 부품, 자재조달 네트워크, 종업원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넷째, 유치협상 및 인·허가 절차가 미흡하다.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는 크게 5단계

21) 영국의 경우에는 단지 공장설계도만 제시하면 투자유치기관에서 기타 모든 것을 해결하여 공장설립 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 투자유치협상단계 ⇒ 인센티브 심의·결정단계 ⇒ 입지탐색 및 부지확보단계 ⇒ 인·허가단계 ⇒ 투자실행 및 생산·영업단계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를 주관하는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지원조직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유인하는 투자유치협상과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 시점이 관련 기관 및 제도상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작동이 가장 필요한 단계이다.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인센티브의 윤곽, 입지혜택(무상임대 또는 분양가 인하) 등에 관한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부처 소관의 인·허가 문제점 및 보안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지탐색, 투자확보 등의 사항들이 동시에 논의가 되면서 투자결정을 유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관행으로 볼 때 사업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인·허가 이전에 투자계획안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및 부지확보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인·허가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의 사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며, 반대로 인·허가 신청을 한 이후 부지확보를 할 경우 정보가 공개되어 부지 매입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의 Invest KOREA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는 그 이후 단계인 인·허가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부지확보 등에 관한 상호이해와 조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 및 법률상의 견제장치가 없다. 그러나 협상을 담당하는 접점부서와 지원기능을 심사 처리하는 지원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간지체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접점이 되는 경우는 프로세스상의 효율이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인·허가처리여부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절차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다섯째, 인센티브 제공절차 및 기준의 취약하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투자에 따르는 기본적인 혜택 이외에 유치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어 공개되어 있을 경우는 인센티브로서의 효력이 반감되어 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을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외국의 경우 투자사례별로 협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고 이는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인센티브는 투자자와 정부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고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공개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의 인센티브 부여체계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히든카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투자 사안별 차등 인센티브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인센티브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과 금융지원 등이며, 현재 법규로서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 두 가지에 불과하나 이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유치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에 긴요한 유치대상 업종과 지역의 경우 보조금과 금융·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유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투자사안별 차등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원범위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1)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자유치 전략

충남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의 성과를 활용하고 충남도의 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우위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집적효과 극대화, 기술혁신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유도할 외자를 중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 대상 업종과 유치대상국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효과, 선진기술의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 총생산량, 원자재의 지역내 조달비용, 지역기업에 대한 산업연관효과, 세수증대효과 및 산업구조 전환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기초로 투자유치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업종,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 세부적인 지원원칙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 토지취득 지원 등에 차등지원 인센티브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표 6-21〉 산업별 유치 전략

대상	업 종	정 의	유치 전략	집적기능 강화
그룹 I	의류, 섬유, 음식료업, 생활용품	성숙산업으로 합리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지역개발 연계 인센티브 - 지자체, 지역기업 중심 해외 IR 	기존 집적지 중심의 재구조화
그룹 II	의약,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운송기계, 정밀화학, 일반기계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유치 대상(첨단산업 신규개발, 기존산업 첨단화를 위한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R&D지원 연계 인센티브 - 유럽의 선진 기계, 부품소재 기술이전을 위한 유럽 및 일본 기업 대상 해외 IR - 외투기업에 대한 부품조달 정보 제공 	선진국 기술이전 및 연관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거점별 특성과 지역간 연계
그룹 III	LCD, 통신기기, 디지털 가전, 첨단 반도체	경쟁력심화를 위한 선별적 투자유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산업의 기능심화(생산→R&D센터) - 인센티브 강화보다는 공격적 해외 IR 실행 	글로벌 소싱의 활성화와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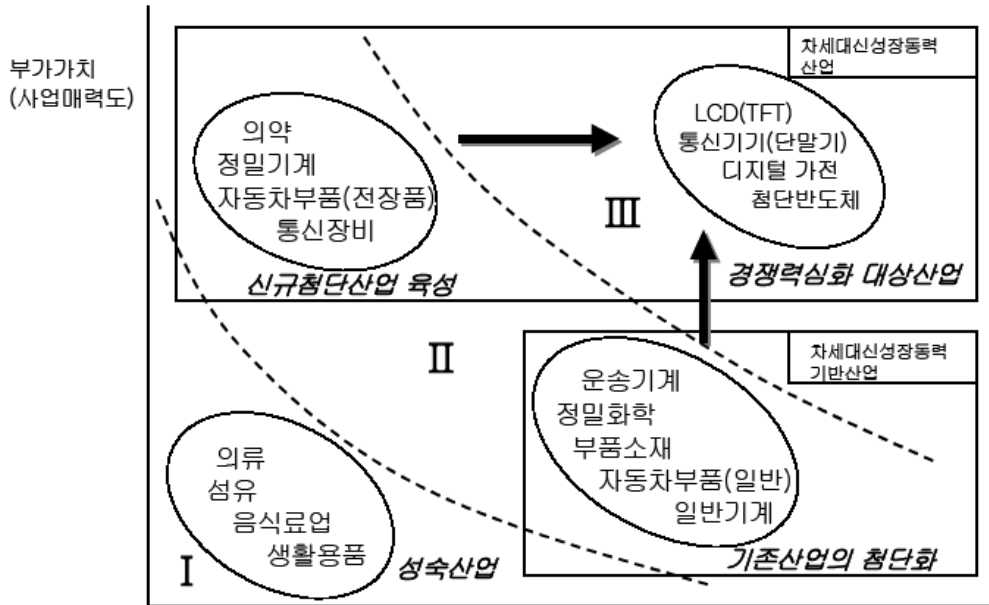
자료: 서중해(2004)

충남도의 강점과 외국 기업의 투자 동기를 결합시켜 유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전략적 판단 없이 업종을 불문한 무차별 외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장기발전과 성장잠재력 확보의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유치활동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중해(2004)는 산업의 발전정도와 유형에 따른 외자유치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남도에 활용할 수 있다.

충남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유치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유치 대상 Target기업 선정

을 통한 기획유치, 업종 선정 및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Master Plan 수립, 지역 연구 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해야 한다.

〈그림 6-3〉 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한 외자유치 방향



자료: 이석희(2004)

2)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 유치

정부는 2007년 12월 충남(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 및 경기(평택시, 화성시 일원) 일원 5개 지구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개발방향은 크게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이다.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완성과 동북아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로 하고 있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아산 인주지구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능과 관광·위락 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든다. 서산 지곡지구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당진 석문·송악지구는 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산업, R&D 기능을 물론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림 6-4〉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이유로는 첫째, 외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인센티브(지방세감면, 임대단지 조성, 토지 무상임대 등) 등이 우수하다. 둘째,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 및 경쟁력이 우수하고, 사업비 조달에 있어 민자 및 외자 조달비중이 높아 정부부담이 낮다. 셋째,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다. 이러한 선정이유는 충남의 아산시, 서산시 및 당진군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상당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조성비 약 7조 중 국고지원은 0.7%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5.9%이며 민자·외자 부담은 93.4%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표연도는 2008-2025년으로 발표하였는데 단계별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6-2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송악·석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 IT부품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 상업·업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 관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부품단지
지 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 상업·업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포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설 · IT부품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단지 · IT부품단지 	
향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단지 · R&D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부품단지 · 바이오단지

〈표 6-23〉 경제자유구역 지원제도

항목	지 원 내 용
절차 간소화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국고지원	기반시설 국고지원
외투기업 인센티브	소득세·법인세 등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관세 3년간 면제,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가능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수도권규제 적용배제, 노동규제 완화, 중소기업 보호규제 일부 배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중·고·대학) , 외국병원 설립 허용 (내국인도 진료)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및 외국방송 재송신 허 용, 1만달러 범위내 외화거래자유(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입주외국인기업등 종사자 공동주택 특별공급(10%내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3)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은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를 공급해 대규모 공장설립형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업체 건립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받게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지적인 의미가 없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제조업, R&D시설, 물류업 등을 합쳐 전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충남의 외국인투자지역은 2005.6월 현재 충남의 3곳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정한 좁은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집중시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낮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이라도 원·부자재의 구매경로나 생산제품의 판매경로가 열려 전·후방 연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기술이전효과 등 소기의 목적인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4〉 충남의 외국인 투자지역

위치	면적	지정일	FDI 규모	사업분야
천안	150	99.11.23	6	천안영상문화단지: 애니메이션
연기	58	00.02.30	66	코리아오토글라스: 자동차 안전유리
아산	112(건물)	04.12.21	923	S-LCD: LCD-TV용 패널

4) 성과지향적 외자유치 추진

성과지향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전개해야 한다. 즉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개정으로 투자성과 인센티브 역할 강화해야 한다. 재정자금 지원방식 개선, 입지지원 사후정산제, 유치 활동예산 차등지원 등이 도입해야 한다. 현금지원제 운용시 지원규모는 고용창출효과 및 낙후지역 우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투자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충남도의 혁신전략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업종별 대책 마련 개최, IR 자료 작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중심 유치조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전문성을 갖춘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표 6-25〉 투자유치 유형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

유형	마케팅 전략
증액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방문, 투자애로 상담회 수시 개최 * 이익 잉여금 재투자자의 경우에도 입지지원 대상에 포함
부품·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요대기업과 연계한 유치활동 및 해외 무역관별 타겟기업 선정 - Japan Desk: 04~05년간 30개 일본기업 유치목표 - 외국 투자환경조사단 초청, Red Carpet 서비스(3회) 및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는 저인당식 유치활동
신성장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희망기업,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투자유치단 파견 * 전략적 기획유치 품목(18개) 및 10개 차세대성장분야 대상
유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내 글로벌 물류기업 및 일본 종합상사 물류센터 유치 - 해수부·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강화 *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무역협회) 및 해수부와 업무협력협정 체결 추진
기타 SOC, 관광,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아 소관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 - 금융: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세계적 자산운용사 유치 - 관광: 수도권내 증자가 체인호텔 유치 * SOC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신규 포함(외국법시행령)

자료: 이석희(2004)

5)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

충남은 수도권에 비해 외국인 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및 문화생활 등 외국인 정주환경에서 외국인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학교 학교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상의 등이 공동 출연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등의 신속히 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추진해야 한다.

6) 기존 투자업체의 지원 강화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시책 추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 외투기업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외국인투자업체 중 충남도에 잘 적응한 외투기업은 충남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여타 지역이나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충남지역에 투자할 때에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

부분의 지자체는 기존의 외투업체의 추가투자보다는 신규 외투기업의 유치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기존 외투기업의 경영상 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외투기업이 추가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신규외국기업의 투자와 동일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외투기업의 분포의 특성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도권이나 동남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도에 소재한 국내대기업과의 집적효과를 제고하고자 충남도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지원할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 진출 외국기업의 충남이전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통계시스템과 모니터링제도의 정비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²⁾.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투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초기의 투자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투자 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정책을 실시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투자성과로는 외투기업의 고용, 부가가치 창출, 생산,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의 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관리는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8) 금융지원의 개선

중소 외국인 신규투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창업지원자금, 산업용지지원, 아파트형 공장 용자지원 등)와 가동중인 업체를 위한 지원제도(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와 금융조달 여건개선(신용보증지원, 보증보험 증권 발행시 연대보증제도 완화)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2) 외국인 투자통계는 투자품목의 경우 대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품목에 투자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진입시장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활동 과정에서 어떤품목을 추가했는지, 투자입지를 어느 곳으로 변경했는지, 지분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투자철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된다.(서울시정개발원, 2006)

9) 투자자관계 관리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센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영국의 투자유치조직인 IBB를 모델로 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미지구축, 투자창출, One-Stop Service, 사후관리 등 투자자관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일관 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센터」를 투자실행단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해외사무소의 증설과 해외공관, 교포, KOTRA지사, 자매도시, 지역연고기업 해외지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통상거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투자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7장 결 론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 및 고용기회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원의 구축차원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지역산업발전과 연계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입감소는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FDI 총량 중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FDI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둘째, 업종별로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제조업에 대한 유입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는 M&A형 FDI의 유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설형 투자인 공장설립 혹은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1억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유치의 경제적 효과가 큰 대형투자의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다섯째, 도착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의 증액투자의 비중이 줄고 있다. 이는 기존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은 전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2000년대에 충남의 외국인 투자액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업종별로 충남의 경우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말 전국적으로 외투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기업 수 기준)은 23.6%와 75%를 기록하였으나, 충남의 경우에는 73.5%와 25.2%를 차지하였다. 셋째, 충남도의 2006년 경우에는 증자가 신규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6년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이 20건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남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투자의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청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06년도 1조 2,717억원(13억 3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생산은 1조 6,211억원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7,240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1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의 유입시 취업자수가 평균적으로 약 544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9,926억원) 화학제품(3,591억원) 및 수송장비(361억원)의 순위를 보였고, 취업효과도 투자액이 많은 전기·전자(4,027명)와 화학제품(1,064명)이 1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생산유발액은 작았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취업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보건(403명), 음식점 및 숙박(287명) 및 운수 및 보관(243명)의 취업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에 기업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104개의 충남소재 외국인 투자기업과 836개의 국내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충남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영상태를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량과 매출액이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사당 평균고용인원은 2000-2006년 중 국내기업에 비해 대략 100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한국은행(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수익성은 외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투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아서 외투기업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로 성장성을 판단할 때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에 우열을 판단할 수 없고, 투자효율성에서도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섯째,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배당률은 높고 사내유보율은 낮아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남 외투기업의 입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적으

로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24개 외투기업 중 천안에 47%인 106개가 소재하고 있고, 아산시에는 16.7%가 소재하고 있어 천안시와 아산시에 63.4%가 집적되어 있다. 2004년을 제외하고는 천안시가 외투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10개 미만의 외투기업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에는 외투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소재 외투기업의 업종별분포를 보면 도소매업(41개), 화학제품(36개), 전기전자(35개), 수송장비(30개) 및 일반기계(24개)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인 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및 일반기계의 집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시에 화학제품(14개), 전기전자(21개), 수송장비(14개) 및 일반기계(20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아산시에도 화학제품(9개), 전기전자(6개) 및 수송장비(7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도소매업의 외투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4→41)하였고, 전기전자(12→35) 및 수송장비(14→30)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전기전자의 경우는 2005-2007년 중에, 수송장비는 2002-2004년 중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넷째, 충남도의 외투기업유치와 수도권의 외투기업유치가 서로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서울 등 수도권이 외투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충남도가 외투기업유치에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투기업의 등록 자료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에서 분석된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자유치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충남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의 성과를 활용하고 충남도의 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실행해야 한다. 고용창출, 선진기술의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 총생산량,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비중, 지역기업에 대한 산업연관효과, 세수증대효과 및 산업구조 전환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기초로 투자유치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업종, 규모, 기여도 등을 고려 세부적인 지원원칙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 토지취득 지원 등에 차등지원 인센티브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는 아산·인

주지구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능과 관광·위락 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서산·지곡지구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당진 석문·송악지구는 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산업, R&D 기능을 물론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조성비 약 7조 중 국고지원은 0.7%에 불과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은 5.9%, 민자·외자 부담은 93.4%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황해자유경제구역의 성공적 조성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지향적 외자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즉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개정으로 투자성과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자금 지원방식 개선, 입지지원 사후정산제, 유치 활동예산 차등지원 등이 도입해야 한다. 현금지원제 운용시 지원규모는 고용창출효과 및 낙후지역 우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투자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충남도의 혁신전략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업종별 대책 마련 개최, IR자료 작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중심 유치조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전문성을 갖춘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넷째, 외국인 정주환경의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및 문화생활 등 외국인 정주환경에서 외국인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학교 학교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상의 등이 공동 출연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등의 신속히 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 투자업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조업 FDI기업들은 투자확대시 현재의 입지지역에서 추가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규유치 위주의 시책보다는 기존투자업체의 확대유도 및 관리시책 추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기존 외투기업의 경영상 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외투기업이 추가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신규외국기업의 투자와 동일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동남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도에 소재한 국내대기업과의 집적효과를 제고하고자 충남도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기진출 외국기업의 충남이전을 지원하는 지원책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통계시스템과 모니터링제도의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계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상과관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태구(2003), 『글로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 경남발전연구원(2000), 「외국 기계부품소재 기업의 경남지역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국토연구원(200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실태분석」
- 김군수(2006), 「해외첨단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 김억현(1999), “충남지역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전략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13권 제3호.
- 남광희·윤성훈(2006),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 대한상공회의소(2004),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실태」
- 산업연구원(2001), 「외국인투자의 일석오조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2005), 「2005년 제조업 외국인투자 현황」.
- 산업자원부(2002), 「외국인투자촉진법」, www.mocie.go.kr 자료실.
- 산업자원부(2004), 「FDI 중장기 비전 및 전략」.
- 산업자원부(2004), 「산업자원백서」.
- 산업자원부(2006), 「2005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과 2006년도 전망」.
- 서울시정개발원(2006),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 시정연 2006-R-30.
- 서중해 편(2004),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II)」, 한국개발연구원.
- 울산발전연구원(2001), 「울산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이병기(2002),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석희(2004),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

원.

이양수(2003), “부산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5권 제3호.

이양수 · 최외출(2001),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보 제14권 제1호.

조택희 · 전일명(2006),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충북경제 파급효과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재정경제부(2006),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및 반외자 정서에 관한 연구」.

차미숙 · 정윤희(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 2002-21.

최용록(2000), 『해외투자론 -이론과 실무』, 박영사.

충남도정백서 각호.

한국은행(2007),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한국은행 제주지점(2001),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방안」,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KOTRA(2003), 『2003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KOTRA(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LG연구원(2006),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Aitken, B. and A. Harrison(1999), "Do Domestic Firms Benefit from Direct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Venezuel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Batchler, J.(1996), "Policy Competi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Development Center Workshop*.

Berhman, J. N.(1972), *The Role of International Companies in Latin America: Autos and Petro-chemic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Blomström, M. and F. Sjöholm(1999), "Technology Transfer and Spillovers: Does Local Participation with Multinationals Matter," *European Economic Review*.

Calder, C., Loayza, N. and L. Serv(2004), "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feedback and macroeconomic effects", *World*

-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192.
- Caves, R.(1982),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ning, J. H.(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Vol. 11.
- Economic Intelligence Unit(2002), "Magnet or morass?: South Korea's prospects for foreign investment".
- IMF(1997), *Balance of Payment Manual*, 4th ed. IMF
- Moosa, I.(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y, Evidence and Practice*, Palgrave.
- OECD(1961), *Code on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OECD.
- OECD(1983),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 Turok, I(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Vol. 27.
- UNCTAD(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Overview*, UN.

<부록-A> 대구·경북지역의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정 책 과 제
유치관련 제도개선	기업유치관련 조직체계의 단일화: 대구시, 경북도 및 기초자치단체 연계
	기업유치 우대 조례 제정 : 지방의회
	예산확보권, 산업단지조성권, 조세감면권 지방이양 건의 : 중앙정부
	민자유치 대상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무상보조금제도 실시 : 중앙 및 지방재정 활용
	기업유치기금 조성 : Matching Fund 형식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도입 등 입지관련 글로벌 마인드 구축
산업입지 지원정책	R&D특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
	전략산업관련 특성화단지 지정·육성 : 대구테크노폴리스, 구미4, 포항4
	산업입지관련 부동산 임대제 도입(최소한 50년 이상)
	분양가 인하 및 저가 공급 방안 강구
	하이테크비즈니스단지 등 유통·물류기반 확충
	수요자 중심의 입지지원 정책 수립
	국·공유 유헴지 무상임대제 실시
투자지원 기능강화	투자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
	투자유치 전문가 풀(Pool)제 운영
	투자자문회사(Fund Manager) 설치 운영
	인수·합병(M&A) 거래소 설치 운영
	국제 파이낸스 및 컨설팅회사 유치
	패키지(Package)형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투자유치관련 조직간 시스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R&D지원센터 및 비즈니스지원센터 설치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확대
	해외 철수 기업의 역내유치 추진
	벤처·엔젤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업무대행 및 공장설립대행센터 운영
	엔젤·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 지원
	업종별·단지별 차등인센티브제 도입
유치대상 분야선정	유치 대상 Target기업 선정 및 기획유치
	업종 선정 및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Master Plan 수립
	지역 연고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지역 유통업과 유치대상 유통업과의 보완적 연계기능 강화
	금융업에 대한 전략적 제후 강화 : 기술 및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민자사업관련 수익률 보장 및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자료: 이석희(2004)

구 분	정 책 과 제
투자협력 네트워크	공공 및 민간기관간의 기업유치관련 정책협의체 구성
	해외공관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체계 강화
	기업유치 관련기관간 업무분담 및 협조 강화
	합작파트너 알선 및 공장용지 관련 정보제공체계 구축
	기업유치관련 협상능력 강화
	각종 신용정보 인수·평가·심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투자유치 홍보체계	투자유치설명회 강화
	대상 단지별·업종별 유치홍보전략 수립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제공 체계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
	대기업 본사 및 역내 기존 기업과 연계한 유치 홍보
	원격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등 정보화관련 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상공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패 키 지 프로그램	‘주인의식 갖기 범시민운동’ 전개 : 글로벌 마인드 확립
	레저·관광·문화이벤트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및 EXCO 제2전시장 건립 : 대구·경북공동운영·활용
	투자유치 박람회 및 상설전시관 운영
	‘기획유치’ 관련 업종 축제이벤트 발굴·육성
	자원활용, 관로, 인력, 주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도시교통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경영환경 개선노력	경영협의체 결성 및 정기적인 상담회 개최
	외자계 기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
	수도권 및 해외 투자유치 거점 확보 : 투자 유치관련 기능 확충
	국제규범에 적합한 각종 생활·비즈니스환경 개선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한 케이블 방송 육성
	부동산 감정평가기관 및 관리전문가 육성
	투자 에이전트(agent)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애로접수 사후관리	애로신고센터 및 외국인 투자애로 해소 협의회 운영
	기업민원직소창구 운영
	대구·경북 투자유치 백서 발간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인·허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
	투자유치 평가분석 법 운영 : 대구시, 경북도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시장개척, 품질개선·지도 등 기업활동 지원업무 수행

자료: 이석희(2004)

<부록 B> 충남의 주요 외투기업 현황

회사명	설립 년도	산업중분류	외국인 투자액 (천 달러)	외국인 지분율 (%)	고용량 (명)
테크노세미켐(주)	1989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961	49	367
(주)계령코리아	198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1,851	100	75
(주)그룹오상	198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50	40	45
(주)나스텍	1987	제1차금속산업	94	0.31	101
(주)내쇼날스타치	1985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5,980	100	179
(주)동방아그로	1971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205	22.68	218
(주)동희로파	2004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160	45	85
(주)두원공조	198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3,685	33.4	496
(주)드림스틸	2001	제1차 금속산업	278	35.54	20
(주)드림텍	1998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4,014	55	160
(주)디디다이아	1995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3,098	50	48
(주)디아يدي	199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374	41.5	498
(주)마이크로컨텍솔루션	200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89	16.2	53
(주)바이오스마트	198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00	10	147
(주)비오씨가스코리아	1975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50,849	100	178
(주)서진인스텍	198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8	49	49
(주)신도리코	196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19,555	20.01	1,086
(주)신창전기	197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359	29.19	913
(주)신창코넥타	199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758	50	125
(주)신호인더스트리	20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07	8.86	70
(주)쎄라그린	20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0	11.36	56
(주)씨티엔티	200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677	40	58
(주)아큐텍반도체기술	1979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040	26	159
(주)에스티에프	200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407	68.39	154

(주)에이비비코리아	1988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9,570	100	415
(주)엔티에스	200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378	60.96	83
(주)엠아이텍	199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96	2.06	120
(주)운수레스	1988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562	33	70
(주)이비티네트웍스	1992	음·식료품 제조업	15,256	7.91	18
(주)인지디스플레이	199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51	7.21	533
(주)코리아스타텍	200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60	31.15	89
(주)코리아신예	1987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801	49	194
(주)코캠	1995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971	34.09	107
(주)티아이오토모티브	198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2,876	100	271
(주)파카공조	198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4,229	100	172
(주)패커드코리아	198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821	50	328
(주)프라코	198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47,717	100	378
(주)플렉트우즈코리아	2002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405	100	43
(주)피케이엘	199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34,030	100	344
(주)한국반도체소재	1997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13,808	95.24	120
(주)한국베탈	1985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002	22.94	234
(주)한국에프엠	198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1,198	100	195
(주)화승지비씨	2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200	80	42
(주)후프코리아	1995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20	51	137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199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862	26.67	156
녹수화학(주)	199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50	16.97	240
대한냉열공업(주)	198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410	35	77
대한정밀(주)	198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224	50	50
대한칼소닉(주)	199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1,059	50	378
도카드동화(주)	1995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376	45	97
동양철관(주)	1973	제1차 금속산업	3,545	14.65	180

롬엔드하스전자재료씨엘피코리아(주)	199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96	100	15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주)	198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0,639	100	246
발레오공조코리아(주)	198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6,306	100	184
베올리아워터코리아(주)	2000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40	100	174
삼성종합화학(주)	1988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5,200	0.83	3
삼성코닝정밀유리(주)	199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85,060	49.88	2,970
삼성토탈(주)	200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87,521	50	916
새론오토모티브(주)	199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899	47	346
세메스(주)	199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445	21.75	728
세코툴스코리아(주)	199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176	100	31
세크론(주)	199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111	45	564
신한일전기(주)	196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611	100	566
쌍신전자통신(주)	197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21	35	132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1996	수리업	6,635	100	75
아이티더브류텍수필름(주)	1999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0,132	100	151
에경소재(주)	199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486	50	50
에경화학(주)	1979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955	50	191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199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7,129	100	320
에드워드코리아(주)	1992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4,456	97	306
에스엘시디(주)	200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925,000	49.99	25
에이에스엠지니텍코리아(주)	199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9,459	100	83
에프씨산업(주)	19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0	30	102
엠이엠씨코리아(주)	199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2,715	80	827
오에프티(주)	19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48	34.12	76
와이엔티파워텍(주)	200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224	40	66
우신공업(주)	1991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773	11.36	273
위니아만도(주)	19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99,707	100	914

유진통신공업(주)	199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7,875	100	98
제일원텍(주)	200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8	7.69	122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주)	1991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32,568	99.88	596
카길코리아(주)	1986	음·식료품제조업	33,325	100	85
카본로렌코리아(주)	198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919	100	67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주)	1998	금융업	17,287	100	8
커민스판매서비스코리아(주)	1996	도매 및 상품중개업	6,900	100	56
코리아웨코스타(주)	199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58	35.03	120
코리아후드서비스(주)	1998	음·식료품제조업	600	40	92
쿠팡스탠다드오토모티브코리아(주)	198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4,347	90	207
테크노세미캡(주)		-	1,961	49	367
프레지니우스카비 코리아(주)	1988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4,652	100	108
핀튜브텍(주)	200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31	52.32	54
하나마이크론(주)	200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000	4.7	776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	1995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0,569	80	70
한국미우라공업(주)	1982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9,786	95.28	275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	1990	농업	5,964	100	51
한국지케이엔(주)	199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8,974	100	89
한국콜마(주)	199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883	21.83	436
한국프라마스(주)	198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948	100	91
한국하니웰(주)	198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9,001	100	680
한부엔지니어링(주)	198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858	97.14	76
해태음료(주)	1999	음·식료품제조업	70,911	81	1,960
행담도개발(주)	1999	부동산업	85,018	90	23
현대약품(주)	1965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600	2.95	511
현대오일뱅크(주)	1964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740,353	70	1,630
희명세미크린(주)	1999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50	45	39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공주대학교 김봉한 교수

공동연구 · 한남대학교 김흥기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

기획연구 2007-10 · 충남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연구

글쓴이 · 김봉한, 김흥기, 신동호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0월 31일 / 발행 · 2007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빌딩 5-6층 (301-745)

전화 · 042-820-1176(산업경제연구팀) / 팩스 · 042-820-1179

ISBN · 978-89-6124-028-4 93300

<http://www.cdi.re.kr>

©2007.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